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3~2014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3~2014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3~2014

인 쇄 2013년 12월

발 행 2013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8 (팩시밀리) 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 늘품플러스 (070-7090-1177)

인 쇄 처 (주) 현대아트컴 (02-2278-4482)

ISBN 978-89-8479-747-5 93340

가 격 7,000원

© 통일연구원, 2013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3~2014



목 차

I. 동북아정세	1
1. 동북아 안보정세	3
가. 총평	3
나. 2013년 동북아정세 평가	3
다. 2014년 동북아정세 전망	8
2. 북핵문제	11
3. 한국의 대외관계	15
가. 한·미관계	15
나. 한·중관계	19
다. 한·일관계	24
라. 한·러관계	27
II. 북한정세	33
1. 대내정세	35
가. 정치동향	35
나. 경제동향	39
다. 사회동향	44
라. 군사동향	49
2. 대외관계	55
가. 북·미관계	55

나. 북·중관계	59
다. 북·일관계	63
라. 북·러관계	66
3. 대남동향	70
가. 대남 동향의 국면 구분	70
나. 2013년 대남정책 특징	72
다. 평가와 전망	74
Ⅲ. 남북한관계	77
1. 남북대화	79
가. 남북당국대화 시도와 무산	79
나. 개성공단 실무회담	84
다. 이산가족 상봉 회담 및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의 결렬	86
라. 전망	87
2. 남북교류협력	90
가. 경제분야	90
나. 사회·문화교류분야	94
3. 북한인권과 인도주의 사안	98
가. 북한인권문제	98
나. 대북지원	104
다. 북한이탈주민문제	109
라. 이산가족문제	113
부록: 2013년 주요 사건일지	117

I

동북아정세 ...



1. 동북아 안보정세

가. 총평

2013년 동북아 안보정세는 새로운 질서형성을 위한 협력과 경쟁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가한 해로 평가된다. 2013년 동북아 안보의 불확실성을 규정하는 구조적 변수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이며, 동북아 안보의 불확실성을 제고시킨 주요 이슈는 북한의 3차 핵실험(2.12)과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중국어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중·일 갈등,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일방 선포(11.23) 등이었다. 동북아 지역은 중국의 도전에 따른 사안별 협력과 경쟁의 반복 등이 다양한 차원과 수준에서 전개되었지만, 미국의 안정자 역할이 유지됨에 따라, 동북아 안보질서는 전반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한 가운데 부분적인 변경이 활발하게 시도되었다.

나. 2013년 동북아정세 평가

(1) 한·중·일 지역협력의 부재

2012년 지도부를 교체한 동북아 각국은 2013년에 신정부의 새로운 동북아정책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G2로 부상한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는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핵심이익을 강조하고 미국에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한 상생의 ‘신형대국관계’ 건설을 제시했다. 미국의 오바마 2기 행정부는 일본, 호주 및 아세안과 협력해 중국을 공동 견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정책을 유지했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수단으로 중국 주도의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제어하고자 했다.

한편, 중국과 역내 주도권 다툼을 벌여온 일본의 아베(安倍晋三) 총리는 중국의 부상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미·일동맹의 강화를 통해 실추된 경제력과 영향력을 회복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미·일동맹의 강화, 가치외교의 전략적 전개,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 강화 등을 제시(1.28)했다. 러시아의 푸틴(Vladimir Vladimirovich Putin) 대통령은 자원을 무기로 동북아에서 영향력 복원을 시도하려는 신동방정책을 제시하였고, 한국의 박근혜정부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제시함에 따라 동북아 각국은 새로운 관계설정을 위한 외교안보적 협력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동북아 각국의 시도는 역내 양자 및 3자관계의 구도에도 변화를 수반하였다. 특히, 2013년 동북아정세에는 한·일 및 중·일관계의 악화와 한·중관계의 개선이 병행되면서 한·중·일 3국관계에 미묘한 구도가 형성되었다. 2012년까지 한·중·일 3국은 인적교류와 경제적 상호의존성 증대를 배경으로 5차례의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한·중·일 FTA 협상에 합의하는 등 지역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새로 출범한 한·중·일 3국의 전략적 목표의 차이는 기존에 내재해 있던 역사인식, 영토분쟁, 민족주의 등의 문제와 어우러지면서 한·일, 중·일관계의 갈등을 야기했다. 이에 따라 한·중·일 정상회의와 FTA 논의도 연기되면서 한·중·일 3국 간 지역협력도 거의 중단되었다. 이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 불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2)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견제 지속

동북아 지역의 역학관계를 규정하는 구조적 변수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관계의 설정이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중 양국은 상호 협력을 필요로 하는 한편, 자국 주도의 질서 구축을 위해 경쟁해왔으며, 2013년의 미·중관계에도 이러한 상호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특성이 지속되었다. 다만, 시진핑 지도부는 신형대국관계로 대미관계를 조정함으로써 향후 미·중 양강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정립하고자 했으며, 미국도 이를 거부하지 않음으로써 양국관계는 협력적 측면이 부각되었다. 미·중이 전략경제대화(7.10~11)를 통해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경제협력에 대한 노력 지속, 전략안보대화(SSD) 신설 등에 대한 원론적 합의를 도출한 점도 이를 방증한다.

그러나 상호 불신에 따른 양국의 견제구도도 지속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재균형 정책을 사실상 대중국 포위봉쇄 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의 부상이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타파하고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의 불신은 미국이 주도하는 TPP 등 아태지역 포괄적 다자주의와 중국 주도의 RCEP 등 동아시아 다자주의의 대결 구도를 유지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미국은 한·일관계 개선 및 한·일의 TPP 참여를 주문하기도 했으며, 3국 공동 군사훈련의 실시(10.10)를 통해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데 활용하였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일방 선포와 조 바이든(Joseph Robinette Biden Jr.) 미국 부통령의 한·중·일 순방(12.2~7) 과정에서 동북아의 현상유지와 변경을 놓고 미·중 간 상호 인식의 차이가 노정되기도 했다. 미국은 현상변경을 야기하는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과의 직접적 대결을 지양하고 한국, 일본, 호주 등의 동맹국을 활용해 현상유지에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미·중관계는 ‘공식적 우호관계 속 비공식적 상호 견제’의 성격을 유지한 가운데, 양국 간 상호 불신과 미해결된 사안도 지속되는 특징을 보였다.

(3) 북핵실험과 6자회담의 교착

2013년 북핵실험은 동북아정세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었다. 한반도의 위기 조성을 통해 새 판을 주도하며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정전협정 폐기(3.5)와 병진노선 선언(3.31), 대남 위협 등을 지속함으로써 동북아의 불안정성을 증폭시켰다. 이에 따라 동북아 각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천명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2094호)에 찬성(3.7)하는 한편, 북한 변수가 동북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을 압박하였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위기조성 행위가 자국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등 기존 한반도 정책을 조정하였다. 중국은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적절히 통제하는 한편, 북핵문제와 한반도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북한을 6자회담으로 유도하려는 등 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추진했다. 하지만 중국의 의도는 한반도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라기보다 대북제재를 남북관계 안정화와 6자회담 재개의 자산으로서 자국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데 있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중 정상회담(6.27~30)과 미·중 정상회담(6.7~8)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주도하였다. 미국은 국내경제 회복과 이란 핵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북핵문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속에서 중국의 역할을 주문하였다. 또한 미국은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의 안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북한 비핵화에 합의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수차례 방북을 통해 북한의 6자회담 참가를 이끌어내는 한편, 한·미·일과 연쇄회동하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중재외교를 추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워싱턴에서 회담(11.6)을 갖고 북한의 진정성 있는 선행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 재개’와 한·미·일의 ‘북한의 진정성 있는 선행조치’ 주장 사이에서, 6자회담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교착국면에 처해있다.

(4) 센카쿠 갈등의 격화

2013년 동북아정세의 핵심 이슈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갈등의 격화였다. 센카쿠를 둘러싼 중·일본쟁은 중·일 간 세력전이와 미·중 G2체제의 공식화 과정에서 수반된 중·일 관계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대미관계를 통한 대일관리를 추진하며 일본을 왜소화, 주변화하는 공세적 외교를 전개하였으며, 일본의 보수우경화로 인한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성 증기를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센카쿠를 비롯한 해양경계선을 핵심이익으로 간주하고서 이를 수호하기 위한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가해양국을 확대·개편하기도 했다.

반면, 일본은 중국의 부상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해왔으며, 이에 대응해 아베 정권은 미·일동맹의 강화를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미·일 정상회담(2.22)을 통해 미국 주도의 TPP 참여를 선언하였고, 미·일 안전보장협의회(2+2)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방위예산의 증액을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외교안보지침(10.22)에 중국을 안보위협요인으로 명기했다. 또한 아베 총리는 취임 직후인 1월 16일부터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을 방문한 데 이어 5월에 미얀마, 7월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10월에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등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순방하며 중국을 견제했다. 특히, 러·일 정상회담(4.29)에서는 포괄적 협력관계 강화에 합의하고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안보협의체 정례화에도 합의함으로써 중·러관계의 이완을 통한 대중 견제도 시도하였다.

이처럼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적극적 견제는 양국 간의 분쟁지역인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갈등으로 표출되었다. 이 지역에서 중·일 간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우려할 만큼 양국은 2013년 한 해 동안 상호 비난과 무력시위의 수위를 높였고,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동북아 지역의 안보 불안정성과 불확실성도 함께 제고되었다.

다. 2014년 동북아정세 전망

2014년 동북아정세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의 대중 견제와 중·일 간 세력전이, 북한(핵)문제 등의 지속으로 인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의 증가와 함께 이를 제어하려는 지역협력도 증가하는 복합적 질서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부상이 지속되는 한, 동북아의 현상 유지나, 변경이냐를 놓고 미국, 중국, 일본은 각자의 국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과 갈등이 수반될 것이다. 특히, 중국이 어떠한 형태로 부상할 것이며, 또 부상하는 중국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14년에도 미·중은 양자 간 경제협력, 역내 및 글로벌 차원의 이슈들에 대한 협력을 모색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미·중공모(원론적 합의)와 미·중경쟁(미해결된, 여전히 시각 차이를 갖고 있는 이슈들로 갈등)의 가능성이 공존하나, 경쟁적 측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미·중 간의 세력전이를 최대한 억제하고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개입과 관여는 증대할 것이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다자간 협의와 협력체 형성을 통해 이를 견제하려는 중국의 대외정책도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은 외교안보적 경쟁과 갈등이 우선하는 가운데, 갈등관리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시도될 것이다.

특히, 병진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 내부의 변수와 이를 둘러싼 관련국의 이해관계는 동북아정세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관련국의 입장과 시각 차이를 고려하면, 6자회담의 조기 재개 가능성은 낮지만, 중국이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을 통제·유도함으로써 남북 관계 및 한반도의 안정관리와 6자회담의 재개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6자회담의 재개는 중국의 추가역할에 좌우될 것이다. 하지만, 장성택 숙청 이후 체제결속을 위한 북한의 대외 위기 조성 행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강화됨과 동시에 북핵문제와 6자회담을 둘러싼 양자 및 소다자(한·미·일,

한·미·중) 간 논의도 모색될 것이다.

2014년에도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갈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낮다. 중국 내 반일 민족주의 정서, 미국의 재균형 정책, 일본의 보수우경화 등이 지속될 것이며,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내재해있기 때문이다. 다만, 역내 무력충돌 및 불안정성의 증가를 고려한 미국의 중재 및 균형자 역할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중·일 간 무력충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한·미·일 안보협력관계의 복원을 유도하고 호주 등 동맹국 활용 및 TPP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대중국 견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며, 이 과정에서 한·일관계가 개선될 여지는 있다.

이에 따라 한·중·일 3국 간의 지역협력도 외교안보적 갈등과 불신을 노정하며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중·일 3국은 지역질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갈등관리 차원에서 3자 간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한·중·일 지역협력의 제도화를 모색할 것이다. 이 경우 3국 간 지역협력의 수준은 북한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중·일 간의 경쟁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3국 정상회의 유지와 제도화의 진전에 대한 외교적 노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즉, 동북아 지역의 안보적 불신과 갈등을 외교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 전병곤 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2. 북핵문제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6자회담이었다. 그러나 얽혀있는 관련국의 이해관계는 6자회담을 더 이상 진척시키질 못하고 있다. 그나마 남아있는 추동력조차 기운을 잃어가고 있다. 6자회담은 2003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200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북한은 핵실험을 비롯한 핵능력 발전을 과시하고 있다. 2013년 초 3차 핵실험을 실시(2.12)하였고,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비롯해 워싱턴 및 동조세력에 대한 불바다와 대미 핵선제타격권리 등의 발언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월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무력과 경제건설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6자회담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물밑 움직임은 조용히 버둥거리고 있다.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는 미국과 한국의 특별대표와 만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재개의 조건을 협의하고 있고,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Glyn T. Davies)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한·중·일을 순방하며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있다.

그러나 6자회담 관련국 간에는 회담 재개에 관한 전제조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회담의 재개는 현재 상황에서 보면 불투명하다. 한·미·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중지 선언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 ▲국제원자력기구 감시단 사찰 수용 등을 비롯해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북·중·러는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대화가 재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29합의 이행에 대해서도 일단 대화가 재개되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전제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문제를 6자회담의 틀 내에서 토론을 할 수 있다는 대화모양새를 취하기도 하는 반면,¹ “우리에게 있어서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핵을 대화 마당에 올려놓고 흥정하려 드는 미국의 망발은 달을 보고 짚는 개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²고 6자회담 재개 전제조건 및 비핵화 요구를 비난하기도 한다.

어느 국가도 핵포기 요구를 북한이 쉽게 수용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핵보유국임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물론 핵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발표 그리고 핵무기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김정일의 지시 등을 고려할 때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는 북한의 의도는 6자회담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할 수 있다. 미국도 이를 모를리는 없다. 미국의 국무부 정책검토 결과에서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체제생존을 위한 수단이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은 그만큼 적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한다.³ 중국의 판단도 미국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은 서로 불만이다. 미국은 중국이 제대로 압박하지 않아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힘든 것이라고 불평이고, 중국은 미국이 체제 및 안전보장을 해주지 않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1 중국에서 열린 6자회담 10주년 기념세미나에서 리용호 외무성 부상의 발언 (『조선일보』, 2013년 9월 18일).

2 『노동신문』, 2013년 11월 19일.

3 『연합뉴스』, 2013년 4월 12일.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방의 탓이라고 언성을 높이는 이면에는 상대방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압박한다고 해도 북한과 같은 폐쇄사회에 변화를 이끌만한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이란과 같은 개방사회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북한의 경우는 수월하지 않다는 것을 미국과 중국은 알고 있다. 중국도 미국이 진취적으로 북한에게 체제보장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핵포기까지는 힘들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서도 서로의 탓으로 돌리고 대화만이 유일무이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두 국가 모두 동북아에서 더 이상의 핵확산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종의 상호 간 암묵적인 면세우기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 수 있는 지렛대는 미국도 중국도 현재는 갖고 있지 않다. 더구나 어떻게 해야 지렛대를 고안할 수 있는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두 국가 모두 자신의 국익이 크게 훼손된다고 여기면 무력이라도 사용할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를 상대로 군사개입을 한 것이나, 중국이 베트남에 무력행사를 불사한 것은 자신의 국익에 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최근의 센카쿠 열도를 두고 군사행동을 하고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한 것도 국익훼손을 염두에 둔 적극적인 개입 사례이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을 두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이유는 북한의 핵이 동북아의 안정을 해칠 수는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이 동북아의 세력판도를 뒤바꿀 수 있다고 보지 않으며, 자국의 핵우산으로 남한과 일본의 핵무장만 막는다면 세력균형은 유지할 수 있다고 여기는 모양이다. 중국도 북한의 핵무장을 동북아의

균형을 해치는 위협요인으로 생각지 않는 것은 물론 자신을 향한 안보 불안으로도 보지 않는다. 어쩌면 6자회담의 틀은 시간이 경과하면 할 수록 이런 식으로 미국과 중국 간 현상을 유지하고 관리하려는 채널로 변모할지도 모른다.

2014년에도 6자회담의 개최를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갈 것이다. 어쩌면 6자회담이 개최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동력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 앞에서 예를 든 사례들처럼 적극적인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이 북한은 외부의 지원 없이도 자체적으로 원심분리기의 핵심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한다.⁴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이 대외 강경기조를 이어갈 경우 4차 핵실험의 가능성도 무시하기는 어렵다. 이제 더 이상은 남한이 자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미국이나 중국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기대고 의지하는 일은 멈추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렇다고 외교적인 제스처까지 중단할 필요는 없다.

- 홍우택 북한연구센터 연구위원

4 『연합뉴스』, 2013년 9월 24일.

3. 한국의 대외관계

가. 한·미관계

오바마 1기 행정부와 이명박 정부 간 긴밀하였던 한·미동맹, 대북 정책, 글로벌 안보이슈 등에서의 정책 공조는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의 집권 2기 시작(1.20)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2.25)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2.12)에 대응하는 데 있어 일관되게 공동보조를 취하였고, 이러한 기조는 양 정상 간 정상회담(5.7)에서 재차 확인되었다. 동 회담에서 양 정상은 대북정책 및 제반 안보 현안에서 양국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과거 한국의 새 정부 출범 후, 한·미 간 대북정책 등에서 혼선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양 정상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동 정상회담을 통해 교감과 신뢰를 구축하였다. 동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는데, 논의된 의제는 실로 2013년 양국 간 핵심 안보 현안이었다. 아래에서는 2013년 이의 전개 양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첫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대북정책의 핵심 추진 과제로 설정한 박근혜정부는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미국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정확하고 옳은 접근’이라고 평가하였고, 미국이 직접 대북대화에 나서기보다는 한국이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이른바 ‘한국 주도의 전방위 외교’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둘째, 한국 정부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전략권 전환을 재연기하자고 미국에 제안하였다(7.18). 전략권 전환은 2012년 4월로 예정되었으나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2015년 12월로 연기되었는데, 한국 정부가 이를 다시 연기하자고 제안한 것이었다. 2013년 전략권 전환 협상과정에서 한국은 전환의 전제조건인 대북 억지력 확보를 중요시해왔고, 미국은 합의된 시기의 준수를 강조하였다. 대북억지력 확보와 관련하여, 한국의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MD)’ 체제 참여 여부가 양국 간 핵심 안보 의제 중 하나이었다. 미국은 한국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저고도방어를 목표로 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의 구축을 추구하였다. 일례로, 미국의 헤이글(Charles Timothy Hagel) 국방장관은 10월 초 한국을 방문한 후, 미사일방어 체제 구축을 위해 양국이 상호성을 높여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그런데 헤이글 장관의 방한 후 한국이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부에서는 이를 한국의 MD 체제 가입의 신호탄으로 해석하였다. 그러자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자회견(10.16)을 통해 KAMD 구축의지를 재천명하였다.

셋째, 양국은 한·미 원자력협정의 만료시한을 2014년 3월에서 2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4.19). 한국은 연장된 2년 안에 한·미 원자력협정이 ‘호혜적’, ‘선진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협정 개정 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일례로, 5월 방미 시 박근혜 대통령은 미 의회에서 한국이 북한과 달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음을 천명하였다. 양국은 6월부터 매 3개월마다 개정 협상을 재개하여 쟁점 현안을 조율하고 있다.

양자 안보 현안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 우호적 안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양국의 공조도 긴밀히 이루어졌다. 2013년 하반기 중국이 6자회담을 재개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면서, 한국과 미국은 6자회담 재개 조건과 관련하여 일치된 목소리를 내었다. 무조건적인 회담 재개를 주장하는 북한과 북한의 입장에 편향적인 중국에 맞서 한국과 미국은 6자회담 재개의 선결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요구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6자회담의 틀에서 양자뿐만 아니라 일본이 포함되는 3자 간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수차례의 공식, 비공식 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6자회담 영역 밖에서의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은 정체되었다. 비록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연계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의 노력으로 미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3국의 공동 군사훈련이 실시(10.10)되기도 하였으나, 일본의 우경화로 인한 한·일관계의 냉각은 3국 간 안보협력을 정체시켰다.

중국은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증진을 중국에 대한 냉전식 포위 전략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 중국의 우려를 의식하여 참여를 선언하고 있지 않은 한국에 대해 미국은 꾸준히 가입을 요구하였다. 일례로 마란티스(Demetrios Marantis)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미국이 한국을 TPP의 잠재적 후보국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3.12), 커틀러(Wendy Cutler) 대표보도 이와 같은 미국의 입장을 확인(4.4)하였다.

2014년에도 위에서 언급한 의제들이 2013년 논의와의 연속선상에서 여전히 한·미 간 핵심 안보 현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한국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미국의 정책 협조를 구하고, 미국은 직접 대북대화에서 기보다는 한국이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쥐는 이른바 ‘한국 주도의 전방위 외교’를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작권 전환 연기와 관련하여 양국은 연기에 무게를 두고 협상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은 제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10.2)에서 양국이 북한 핵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하여 ‘맞춤형 억제’ 전략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전작권 환수시기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근거한다. 즉, 양국은 증대하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으로 인해 전작권 전환의 재연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의 재연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은 전환 후에도 한·미 연합 방위력이 북한의 위협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가이다. 양국은 키 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등을 통해 이를 점검할 것이다. 점검 과정에서 한국군의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제 구축 정도가 판단의 근거로 준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자국 주도 MD에 대한 한국의 참여 요구를 둘러싼 양국 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은 고층방위보다 저층방위가 더욱 효율적이라는 군사 기술적 이유로 미국 주도 MD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기 위한 미국의 기제로 MD를 인식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고려도 한몫을 하고 있다. 원자력협정 개정을 둘러싸고도 양국 간 견해차가 쉽게 좁혀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우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은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다.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의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다.

한국의 TPP 참여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12.6)한 바이든(Joseph Robinette Biden Jr.) 미국 부통령은 TPP가 미국의 아태지역으로의 재균형 정책에 있어 중요한 축임을 강조하였다. 2013년 한국이 이미 TPP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TPP 참여의 시기를 놓고 저울질하면서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논의 국면에서 양국은 2014년에도 양자 및 일본을 포함하는 3자 간 정책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 틀 밖에서의 한·미·일 안보협력은 쉽게 복원되지 않을 것이다. 집단 자위권 확장 등 아태지역에서 안보 역할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는 일본과 일본의 우경화를 경계하는 한국이 안보적 측면에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북아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연계를 꺾고 있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안보협력관계를 복원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일례로 앞서 언급한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 예방 시, 바이든 부통령은 동북아 안정을 위해 한·일관계가 복원되어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2014년에는 미국의 한국 정부에 대한 한·일 안보관계 증진 요구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 박재적 국제관계연구원 부연구위원

나. 한·중관계

2013년은 한·중 양국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상호 기대 및 협력의 필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협력관계가 양호한 한 해였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및 일본의 우경화 추세가 확대되

면서 중국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되었고, 한국은 동북아 역학 구도의 변화 속에서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상호 신뢰 및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협력 노력을 전개하였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적극적 관심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부터 시작되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신속한 축전 및 축하전화뿐 아니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천즈리(陳至立) 중국 특사가 박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를 방문(2.25)하는 등 한국에 대한 디테일한 외교를 연출하였다. 무엇보다 한국이 가장 신경 쓰는 북핵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 행보를 보여주었다.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087호 찬성(1.22)에 이어,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결의안 2094호까지 연이어 찬성하였고(3.7), 과거와 달리 각 정부부처에 제재 결의안의 철저한 이행을 지시하고, 대북 금융제재까지 동참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특사단 접견(1.23) 자리 등 여러 차례 북핵 불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천명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력에 상당한 기대가 제고되었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한·중 정상회담(6.27~30)이 개최되었다. 한·중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와 의의는 한·중 간 상호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데 있었다. 한·중 정상은 양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소통 강화를 결정하였고, 북핵문제에 있어 진일보한 협의를 이끌어내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공간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비록 중국이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하여 북핵 불용의 입장을 공동성명에 명문화시키지는

못했지만,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핵무기 개발의 위협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등 중국의 진일보한 입장 전환을 견인하였다. 무엇보다 중국 측이 한국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은 향후 북핵문제 해결 및 동북아 평화협력 실천에 있어 한·중 간 협력 공간이 확대될 것을 예상케 하였다.

이 밖에도 양국 정상은 경제협력의 질적 심화를 위해 한·중 FTA 협상 진전 및 IT, 금융, 에너지분야 협력확대, 중국어선 서해 불법 조업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인문·문화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한·중 교류 심화 발전 등에 합의하였다.

한·중 정상 간 합의 사항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후속 실천들도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우선 양국 간 역사 갈등 치유와 인문 유대 확대 차원에서 제의된 중국군 유해 송환 제의 및 안중근 의사, 광복군 표지석 설치에 대한 협조에 진전이 있었다. 다음으로 지난 11년간 협상의 큰 진전을 보지 못했던 상대 국민 체포 통보에 관한 영사협정 문안이 합의(9.25)되었으며, 한·중 공공외교 포럼(9.24),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11.19) 등이 활발하게 개최되면서 사회·문화 방면에서 구체적인 협력 활동이 연출되었다.

경제분야에서는 한·중 FTA와 관련하여 많은 진척이 있었다.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타결(9.6)되고, 2단계 협상에 돌입하였으며, 2012년에 중국 측 사정으로 미개최되었던 19차 한·중 경제공동위가 재가동(11.20)되면서 한·중 FTA의 조속한 실현을 확인하였다.

정치·안보분야에서는 다양한 소통채널 확대 차원에서 외교·안보 고위급 대화 채널인 청와대 안보실장-중국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11.18)와 한·중 국책 연구기관 합동 전략대화(12.5) 등이 개최되었으며,

1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10.22)와 한·중 어업협의회 출범(12.26) 등을 통해 중국불법어선에 대한 양국 공동감시 강화와 긴급사태를 대비하기로 결정하였다.

군사분야 협력 역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군사회담(6.4)에서 양군 수뇌부는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의 일치를 재차 확인하였고,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 3차 국방 전략대화(11.28)에서는 양국 국방부 간 핫라인 개통 증진, 청년 장교 교류 확대 등 군 고위급 인사교류 강화 및 전략 소통 강화를 합의하였다.

이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에 큰 진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양국 간 기존의 인식차이와 이견 등으로 인한 갈등 역시 지속되었다. 무엇보다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 의견 차이는 여전하였다. 중국은 북핵에 대한 반대 입장은 명확히 하였지만, 북한의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입장을 지지하는 등 한국과 입장 차이를 노정하였다. 2012년 양국 갈등의 큰 이슈 중 하나였던 중국의 탈북자 복송 및 재중 탈북자 인권 문제 역시 중국이 5월 라오스 탈북 청소년의 복송을 승인하면서 한국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또한 동북아 역내에서 중·일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이어도가 포함된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선포(11.23)함으로써 올 한 해 차곡차곡 신뢰를 쌓아 가던 한·중관계에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2014년도 역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제들이 작동할 것이 예상되는바, 양국 간 우호 증진과 신뢰 구축은 지속될 것이다. 중국은 자국의 평화발전과 핵심이익 수호에 한국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2013년 한·중

관계 진전의 성과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려 할 개연성이 높다. 무엇보다 중국에게 한국과의 협력관계 지속은 자국의 유리한 역내 질서 수립에 기여하며,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일의 견제를 전략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일동맹 강화 추세 속에서 한·미동맹 강화가 미국의 중국 견제 라인 편입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중국에게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동북아 역내 경제 질서 선점 경쟁에서 한국의 협력을 견인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은 한·중, 한·중·일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통해 자국 주도의 경제 질서 구축을 희망하고 있다. 그에 반해 미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구상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참여를 유인하며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3대 무역상대국인 한국과의 경제협력 안정 및 제도화를 위한 FTA 추진 등 경제분야 협력에 적극적인 수밖에 없다.

이 외에도 중국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에 유리하고, 북핵문제로 인한 한·미동맹 강화가 중국의 국익에 불리하다고 판단하는바,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국과의 외교적 협력을 증대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역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공간을 확대를 희망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기제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킬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 지도부가 중화민족의 부흥과 확장된 국가이익의 수호를 위해 적극적이고 강경한 대외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동북아정세의 악화 속에서 부분적으로 한·중갈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 2013년 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따른 갈등은 내년 한·중 정치·안보분야의 최고의 핫 이슈로 지속될 것이 틀림없고 동북아

역내 미·중, 중·일갈등의 확산 역시 한·중관계 발전에 일정정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중관계 발전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북한문제와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 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동북아정세 악화는 한·중 간에 쉽게 오해의 간극을 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공전되고, 이에 불만을 가진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 군사 도발 행위를 통한 판 흔들기 전략을 구사한다면, 한·중 간 인식과 기대 차이에 따른 갈등 악화가 재현되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 이 외에도 미·일동맹 강화 추세 속에서 중국이 한·미동맹 및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한 과도한 경계와 이에 따른 양국 간 오해 심화 및 국민감정 악화 역시 예상 가능하다.

• 이기현 기획조정실 연구협력부장

다. 한·일관계

2012년 한·일관계는 일부 일본 우익세력들의 ‘위안부 평화비의 소녀상’에 대한 저급한 행위로 인해 다소 불편과 갈등을 종종 겪다가,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8·15 경축사에서의 ‘일왕 사죄’ 발언과 그에 대한 일본 정치인들의 거친 반발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며 일시에 급랭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민주당에서 자민당으로 정권교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기 총선’의 권력게임이 전개되면서, 독도 영유권 문제와 위안부 문제가 일본의 국내정치에 이용되고, 한·일관계는 한층 악화되었다.

이와 같은 한·일관계의 악화에 대해 한·일 양국에서 우려하는 여론이 나타났고, 한·일 양국도 외교채널을 통해 악화일로에 있는 한·일

관계를 진정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즉, 악화일로에 있는 한·일 관계는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의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갈등의 봉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 일본인 지식인과 시민단체는 동년 9월 도쿄의 참의원 회관에서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일본의 탐욕’에서 비롯됐다고 일본의 자성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일관계는 아베 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국내정치에 우경화 성향의 영향을 받으며 전후 최악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2012년 12월의 중의원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하고 아베 정권이 등장했는데, ‘위기 돌파 내각’의 아베(安倍晋三) 총리는 침체된 일본 경제의 부흥을 위해 ‘아베노믹스’, 즉 ▲과감한 금융완화 ▲재정의 기동성 강화 ▲성장전략을 3축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소위 “정상 국가”를 지향한 ‘민족주의적 국가관’의 확립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아베 총리는 우경화된 국가관 확립, ‘자학(自虐)사관’의 극복 등을 지향하여 과거사에 대한 퇴행적 언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를 피력한 데 이어 ‘무라야마 담화’에서 언급한 일본의 제국주의의 ‘침략’을 부정하는 발언(4.23)을 하였고, 나아가 ‘731’ 숫자가 편명으로 적힌 훈련용 전투기에 탑승(5.12)하기도 하였으며, 야스쿠니 신사를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에 비유하는 억지 발언(5.19)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퇴행적 역사관에 입각한 언행은 아소(麻生太郎) 부총리, 하시모토(橋下徹) 일본유신회 공동대표 등 강성 보수 성향의 유력 정치인들에 의해서도 이어져 갔다.

그리고 한국, 중국 등을 자극하는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도 2013년에 가장 많은 인원의 참배가 이루어졌다. 2013년 4월의 야스쿠니신사 춘계 예대제에는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168명의 국회의원들이 참배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일인 8월 15일에는 아베 내각의 각료 3명과 여야 국회의원 100여 명이 참배하였으며, 추계 예대제(10.18)에는 아베 내각의 각료, 여야 국회의원 159명이 참배하였다.

이와 같은 우경화 성향의 일본 정치인들의 언행과 대규모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한국, 중국 등을 자극하면서 반발을 초래하였다. 즉, 한·일 관계는 아베 정권의 등장에 따른 우경화 성향의 심화, 일부 극우단체들의 험한 시위 증가, 극우 정치인들의 퇴행적 역사관에 의한 언행 등에 영향을 받아 심각할 수준으로 냉각되고 악화되었다.

한국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무리아마 담화를 부정한 아베 총리의 역시 인식과 시대착오적 언행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의 뜻을 표했고(4.26),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여 아베 내각의 과거사 부정 언행에 대해 ‘일본 각료 등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을 채택(4.29)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게 “과거를 직시하려는 용기와 상대방의 아픔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하였다.

일본 국내에서도 한·일관계의 악화에 대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총리의 우려, 일본 시민단체 및 지식인들의 우경화에 대한 비판 등이 제시되었다.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安倍昭惠) 여사는 한류 뮤지컬 관람(5월) 및 ‘한·일 축제 한마당’ 행사(9월) 참석 등을 통하여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양국 정상 대화’가 어려운 상황으로 냉각된 한·일관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일본의 험한(嫌恨) 시위는 2009년의 30건에서

2012년의 301건으로 3년 사이에 10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는 9월 말까지 243건의 혐한시위가 발생하였다. 한·일 간에 예정된 각종 회의나 행사들이 보류되고 취소되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대해 한국은 부정적 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2013년 11월 말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의원연맹의 회의도 예전에 비해 매우 냉랭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이처럼, 한·일관계는 2013년에 들어와서 가해자로서 진정한 반성이 없는 일본 지도자들의 언행으로 인해 전후 최악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악화되었다.

향후 한·일관계는 현재의 상황이 최저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양국의 전문가, 정치인들이 더 이상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고 있고, 중국 변수도 한·일관계의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개선을 향하여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 배정호 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라. 한·러관계

2013년 한·러관계는 박근혜 대통령의 상트 페테르부르크 G20 회의 참석 및 푸틴(Vladimir Vladimirovich Putin) 대통령의 방한 등 전반적으로 발전적 추이를 보였다. 당선(2012.12.20) 직후 박근혜 당선인은 브누코프(Konstantin V. Vnukov) 주한러시아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모든 분야에서의 러시아와의 상호 유익한 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 철도 그리고 전력의 연결은 동북아 내에서의 평화 구축과 공동번영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언급

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신북방정책과 한·러 FTA의 재추진을 발표(5.21)했으며, 제13차 한·러 경제과학기술 공동위가 서울에서 개최(7.9)되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과의 첫 한·러 정상회담(9.6)이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중에 성사되었다. 당시 양 정상은 북극항로와 항만, 그리고 철도·에너지 연결 등 전반에 걸친 협력의사를 표명했으며, 푸틴 대통령의 방한도 협의되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라시아 협력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면서 러시아와의 협력이 주요한 국정과제로 부각(10.18)되었으며, 푸틴 대통령의 공식 방한(11.13)이 성사되었다.

2013년 상반기 박근혜정부의 한·러관계는 러시아 특사파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 비해 지체된 양국 간 정상회담으로 인해 러시아 경시정책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대규모 사절단을 동행하고 진행되었던 미국(5월)과 중국(6월)의 공식방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정조차 협의가 되지 않은 러시아 공식방문 일정은 9월 상트 페테르부르크 G20 회의에서의 한·러 간 정상회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특히, 북핵문제 해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한국은 이 문제를 단독으로가 아니라 미국, 중국과 같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해결해 갈 것’이라고 표현하는 등 수사에서도 러시아를 배제하여 러시아 측의 불만을 야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발표된 신북방정책 및 한·러 FTA 추진계획은 러시아의 적극적인 협력을 견인해 내는 데 한계를 보였다.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및 벨라루스와 관세동맹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한국과의

FTA에 대해서 러시아가 관세동맹의 이름으로 임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한·러 간 제13차 고위급 실무회담이 지난 7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한국 측은 현오석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미래부, 외교부, 국토부, 산업부 등 14개 부처 국과장급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러시아 측은 빅토르 이샤예프(Victor I. Ishaev) 극동개발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경제개발부, 에너지부, 교통부, 산업통상부, 농림부 등 15개 부처 국과장급이 대표단으로 참석하였다. 양국 신정부 간 처음으로 개최되는 범부처 차원의 고위급 경제협력 논의의 장으로서, 또한 9월에 있을 첫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무역·투자, 에너지·자원, 건설·인프라에서부터 과학기술우주, 농업, 보건·의료, 문화·관광에 이르기까지 10대분야에 대해 폭넓은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

9월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가스관사업의 지연에 대한 러시아 측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연결사업과 유라시아 협력 비전을 설명했으며, 이에 푸틴 대통령은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이 외에도 러시아의 동북아 개발프로젝트와 관련한 협력강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는데 시간 관계상 주로 경제문제를 위주로 한 양자협안에 대해 40분간 회담이 이루어졌다.

푸틴 대통령의 방한과 한·러 정상회담(11.13)은 정체된 양국관계에 의미 있는 실질적 진전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은 남·북·러 3각 협력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정체기를 겪고 있는 한·러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동력을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한·러 간 정치·안보 대화 강화 ▲민간 교류 활성화 ▲교역·투자 확대 ▲지역협력 강화 ▲실질협력 확대(나진-하산, 수산, 교통인프라, 북극항로 개발, 우주·과학기술, 농업 등) ▲국제무대협력,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을 담았다.

정상회담 후 개최된 협정 서명식에서는 ▲일반여권 사증면제 협정 ▲문화원 설립협정 ▲한반도중단철도, 시베리아횡단철도 사업 협력을 위한 MOU ▲한·러 상호 방문의 해 MOU ▲나진-하산 물류협력 사업 참여를 위한 MOU ▲수출입은행과 러시아 대외경제개발은행 간 한·러 투융자 플랫폼 MOU ▲한국투자공사와 러시아 직접투자자금 간 공동 투자 플랫폼 MOU ▲대우조선해양과 러시아 로스네프트·가스프롬·소브코мп로트(러시아 국영해운선사) 간 조선협력 MOU ▲보건·의료 협력 MOU ▲선급 협력 MOU ▲동북아 수퍼그리드 협력 MOU ▲태양광 발전소 건설협력 MOU 등이 체결됐다.

합의된 한·러 양국의 협력방안은 조기 추진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된다. 조기 추진과제에는 나진-하산 물류사업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주사업(16척)이 포함됐다. 극동 시베리아 투자 지원을 위한 양국의 금융기관 간에 공동 플랫폼을 구축한 것 역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북극항로 개발협력, 한반도중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 파이프를 통한 천연가스 운송(PNG), 남·북·러 전력망 연계사업은 중장기과제로 남겨뒀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 양측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2005년 9·19공동성명을 포함한 비핵화 의무와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고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또한 한반도가 아니라 ‘평양’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독자적인 핵·미사일 구축을 용인할 수 없다”,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하며 북핵 불용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양국 간 공동성명에서 “9·19성명의 목표에 따라 6자회담 참가국들과 회담 재개의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다”며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는데 이는 6자 회담 재개조건에 대한 양국의 인식차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사전조치를 우선시 하는 한·미·일 3국의 입장과 달리 북한, 중국과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인 대화재개 필요성에 무게를 둬으로써 그 온도차를 보였다.

한·러 간 대화채널 구축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양국 간 최고위급·고위급 안보대화를 강화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러시아 연방 안보회의, 외교부 간 정례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는 한·러 간 안보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2014년 한·러관계는 푸틴 대통령의 방한과 양국 간 협력관계의 확대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의된 조기 과제 및 중장기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경우 양국 간 관계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현 정부의 주요 외교 정책 기조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역시 러시아와의 다양한 협력 틀 속에서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고 동시에 한국 경제의 활로를 찾고자 하는 시의 적절한 돌파구라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는 점도 주목의 대상이다. 특히 동북아 다자안보를 추구하는 러시아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친화력이 있다는 점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조한범 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II

북한정세 ...



1. 대내정세

가. 정치동향

2013년도 북한 정치 최대 화두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김정은 정권의 안정과 유일영도체제의 조기 확립이었고 이를 명분으로 장성택을 처형(12.13)함으로써 대미를 장식하였다. 북한은 대내외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체제 리더십을 과시하려 하였다. 북한은 “민심은 천하지대본”이라고 선전하며 적극적인 민생 행보를 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핵무력 과시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였다.

북한은 3차 핵실험(2.12) 이후 “핵실험은 핵보유국임을 인정시킨 정치적 승리”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제3차 핵실험에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군인건설자, 일꾼들에게 특별감사문을 전달하는 모임을 열기도 하였다(2.21).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핵무기 보유를 기정 사실화하면서 경제노선을 중시하는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채택(3.31)했다. 그러나 병진노선은 상징적 의미가 강하며, 실질적인 세부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한 듯이 보였다.

북한은 5년 만에 ‘전당 당세포 비서대회’(1.29), 13년 만에 중대장·중대 정치지도원대회(10.17), 29년 만에 3대혁명소조 열성자 대회(11.21)를 개최하였다. 이들 정치 행사는 기층조직의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특히 장성택의 숙청과정과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6월에는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을 39년 만에 수정하였는데 장성택 숙청 시 사용된 ‘동상이몽, 양봉음위’라는 용어가 이때 포함된 것으로 보아서

장성택을 겨냥하고 김정은 후견인 체제의 종식과 유일영도체제의 확립에 박차를 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이후 당·정·군의 주요 인사 218명 중 첫째인 2012년에는 68명(31%)을, 2013년에는 29명(13%)을 교체함으로써 44%인 97명이 교체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과정에서 권력의 핵심인 운구차 8인 중 최태복과 김기남을 제외한 5명이 전원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리영호 총참모장, 우동측 보위부 제1부부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이 모두 물갈이되었고, 특히, 장성택의 숙청은 후견체제의 종식을 의미하는 가장 극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장성택의 측근인 행정부 제1부부장 리용하와 부부장 장수길의 처형과 함께 상당수의 주요 인사가 포함되었거나 앞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대대적인 물갈이가 의도한 대로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보장하고 유일영도체제가 정착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김정은이 마음대로 권력의 핵심인물들을 제거할 수 있을 만큼 권력을 장악했고, 물갈이를 통해 발탁된 새로운 인물들이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설령 일부 불만이 있더라도 숙청에 대한 두려움으로 절대적인 충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정치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잦은 숙청으로 인해 권력 엘리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이러한 불안감이 겉으로는 충성스럽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반격을 준비함으로써 정권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권력의 2인자이며 김정은 후계체제의 설계사였던 장성택의 실각으로 권력의 일정부분 공백이 불가피하고, 그 공백을 군이 채울 경우 상호 견제와 균형이 깨져 오히려 정치적 불안정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시장 확대와 정권보다는 시장에 대한 의존의 증가가 향후 북한 정권의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이 추진 중인 평양 10만 호 건설 사업을 통한 아파트 분양, 핸드폰 허용, 물놀이장 건설, 햄버거와 스파게티 식당 개점 등은 하나의 정책적 목표하에 진행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위험성을 감수하고 시장으로부터 돈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이다. 북한 정권은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권력의 장악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014년에도 김정은 정권의 안정과 유일영도체제의 공고화가 북한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후견체제가 끝나고 김정은의 친정체제가 시작됨에 따라 장성택 측근들에 대한 추가 숙청 등 흔적 지우기와 후속 인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성택 숙청 이후 보여준 모습대로 북한은 겉으로 차분한 모습을 보이면서 내부적으로 조용히 숙청을 진행할 것이다. 김정은은 장성택 숙청 이틀 만에 마식령 스키장 공사장 현지지도에 나서는 등 밝은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이길 원하며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 경제활동에 매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려 하였다.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숙청이 진행되지만, 측근들로 알려진 인물들 대부분이 김정일 추모 2주기 때 모습을 드러낸 것처럼 눈에 띄는 인물들에 대한 숙청은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잠시 미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건강 악화 이후 계속된 숙청과 의문사는 북한 엘리트들의 두려움과 함께, 갈등과 반목을 심화시킴으로써 북한 정권의 불안정 요인으로 남을 것이다. 2014년 4월 개최예정인 최고

인민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 새로운 정책방향 제시, 대대적인 인사가 예상된다. 또한 김정은의 측근들이 대거 발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일영도체계의 공고화가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나타났던 당의 복원, 공안기구의 일원적 지휘체계, 군의 역할 축소 등 권력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은 내부 배반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공안정치를 강화하고 자신의 독재 권력을 관리해주고 권위를 정당화해주는 당의 정치가 절실했다. 따라서 북한의 통치기구 정비는 공안기구들에 대한 일원적 지휘체계 마련, 당 기구의 복원이라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북한은 내각 산하 인민보안성을 ‘인민보안부’로 개칭하면서, 종전의 국가안전보위부·인민무력부와 함께 국방위원회 산하로 이관했다. 국방위원회 인물 구성도 종전 군사·군수산업 관련 인물 중심에서, 군 총정치국장, 국가안전보위부장, 인민보안부장 등 공안정치를 책임진 간부들을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충원하는 관행을 정착시켰다.

공안기구를 일원적으로 관리하던 장성택이 실각함으로써 공안기구의 일원적 지휘체계가 해체될 것인가, 인사와 정책에 있어서 당의 기능이 약화되고 군의 영향력이 다시 커질 것인가 주목된다. 후견체제하의 당, 군, 공안기구 간 견제와 균형이 장성택의 실각으로 무너지고 김정은의 장악력이 이를 대체하지 못한다면 자칫 군의 역할이 다시 커지면서 정치적 불안정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 최진욱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나. 경제동향

지난 2년 사이에 북한은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두 가지 중대한 사건을 경험했다. 하나는 김정일의 사망과 김정은의 권력 승계였고, 다른 하나는 3차 핵실험과 이에 따른 UN의 대북제재 강화 조치였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특별히 어려워졌다고 볼 만한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적어도 2013년 12월 현재까지 권력 승계는 별다른 경제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고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경제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식량 사정에서 찾을 수 있다. FAO와 WFP의 조사에 의하면, 북한의 식량생산은 2011년부터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지난 3년간의 실적은 1995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몇 해 동안 북한의 농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비교적 적게 입었으며 2013년의 기후조건은 더욱 좋았다. 중국으로부터 비료 수입이 증가해 시비량이 늘어난 것도 중요한 생산 증가 요인이었다.

물론 식량생산이 증가한다고 해서 북한의 식량난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자연 기후조건은 대체로 농업에 불리해 작황이 좋아도 상당한 양의 식량을 외부에서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며, 따라서 외부 도입량의 변동이 식량사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북한 당국이 FAO와 WFP에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북한의 2013년 식량도입량은 2012년보다 크게 줄었다. FAO와 WFP의 조사에서 2013년의 식량소비 사정이 2012년보다 다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의 식량소비는 2011년 및 그 이전에

비하면 한결 나아진 상태로 보고되었다. 북한은 여전히 식량부족 및 영양부족 문제를 안고 있지만, 1990년대 중후반 같은 대기근의 징후는 관찰되지 않고 있다.

북한 당국은 지난 몇 년 동안 ‘강성대국’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활발한 건설과 투자 활동을 벌여 왔는데, 이런 추세는 2013년에도 계속되었으며 산업정책 방향에도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2013년 신년사에서 ‘인민생활 향상’ 목표를 강조하고 농업과 경공업을 경제의 주공전선으로 지목한 데 이어 3월에는 전국경공업대회를 열어, 일각에서는 북한의 산업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품기도 했다. 그러나 예산계획에서 석탄, 금속, 전력, 철도 등 기간산업 부문에 대한 지출 증가율이 여전히 농업 및 경공업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북한 언론에서 경공업 부문 투자 소식이 활발하게 보도된 점이 눈에 띄긴 하지만, 전통적 중화학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자주 강조되고 있다. 2013년의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현상은 평양을 중심으로 상업, 문화, 보건, 위락 및 체육시설 건설이 매우 활발했다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이 내건 ‘인민생활 향상’ 목표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도 있으나, 평양 중심이라는 점에서 전체 주민보다는 특권 엘리트 집단을 위한 정책으로 해석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 동안 사경제 활동도 한결 활발해진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 당국이 2009년 말에 실시한 화폐개혁과 그 후의 시장 억압 조치가 일시적으로 사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기도 했지만, 2010년 봄 이후 최근까지의 정책 기조는 대체로 사경제 활동을 풀어주는 방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금도 북한 당국은 종종 시장을 통제하고 단속하기도 하지만, 2010년 이전 몇 년 동안에 비하면 한결 윤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북한의 사경제 부문에서는 영세한 생계형 활동만이 아니라 흔히 ‘돈주’라고 불리는 개인사업가들의 사기업 활동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시장 통제 완화 정책 덕분에 이런 사기업 활동은 더 활발해졌을 것으로 보이며, 국영기업·국가기관과 사경제·사기업 간의 거래도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경제·사기업의 성장과 국영기업·국가기관의 시장 이용은 2000년대 초 이후 북한 경제의 생존과 안정을 가능하게 한 주된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인은 북·중경협이다. 북한의 주요 경협 상대국은 중국과 남한인데,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경협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중국과의 경협이 북한 경제에서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2009년에서 2012년 여름 사이에 북·중교역은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중국의 해외자원 수입 수요 증가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북한의 대중국 광산물 수출이 급증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은 광산물 수출 증대로 획득한 외화 덕분에 중국으로부터 각종 공산품(산업용 중간재, 자본재 및 수송기기, 소비재) 수입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성장세 둔화로 인해 북·중교역 증가세도 2012년 여름 이후 크게 둔화되었다. 2013년 들어서는 UN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중교역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UN 제재가 북·중교역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중국의 대북한 수입)은 2013년 1~10월에 전년 동기 대비 12%, 대중국 수입(중국의 대북한 수출)은 1.8% 증가하였다.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긴

했지만, 최근 북·중교역 규모는 2009년 이전에 비해 몇 배로 커졌으며, 그만큼 북한의 경제사정 호전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2013년의 북한 경제에서 나타난 중요한 긍정적 현상 중 하나는 물가와 환율이 안정되었다는 것이다. 2009년 말 화폐개혁 이후 북한에서는 몇 년 동안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는데, 2013년 초 이후에는 물가와 환율 모두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2010~2012년 사이에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던 이유, 그리고 2013년 초 이후 물가가 안정된 이유를 정확히 알기는 힘들지만, 한 가지 유력한 가설은 북한의 재정·통화정책이 과도한 팽창 쪽으로 나가다가 다시 균형 쪽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과도한 통화증발 때문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고, 북한 당국이 통화를 증발한 것은 재정 수입 이상의 재정지출을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물가가 안정된 것으로 보아 통화공급이 적정 수준 내로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북한 당국이 재정수입을 충분히 늘려 재정균형을 맞췄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재정지출 증가세를 적절히 억제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외화수급 상황이나 시장거래 상황의 변동도 환율과 물가의 움직임을 결정한 중요한 요인이었을 수도 있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북한 경제 전망과 관련해 가장 주목할 부분은 북한 당국의 개혁·개방 움직임이다. 2012년에 ‘6.28 방침’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북한의 개혁 움직임은 2013년에는 더욱 뚜렷해졌다. 김정은은 2013년 3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제기함과 동시에, ‘우리식의 경제관리방법’을 적용해 경제 건설에 박차를 가할 뜻을 천명하였다. ‘우리식의 경제관리방법’이란

물질적 인센티브 효과를 제고하려는 정책으로서, 주된 내용은 농업 부문에서는 협동농장의 ‘분조관리제’와 ‘포전담당제’ 강화, 국영기업 부문에서는 기업 자율권 및 이익의 내부 유보 확대와 무역 분권화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이 2013년 5월에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한 데 이어 11월에 신의주 경제특구(북한은 ‘특수경제지대’로 표현)와 13개 경제개발구 설치를 발표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북한 당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 경험과 비슷해 보이지만, 중국에 비해 훨씬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전면 실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연구·실험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비록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이런 정책 전환이 의미 있는 진전을 가져올 수도 있다. 북한에서는 이미 자생적으로 개혁적인 성격을 갖는 변화, 즉 비공식경제(사경제 활동 및 국영기업의 비공식 활동)의 확대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당국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모방하는 정책 변화를 시도한다면, 비공식경제를 더 폭넓게 허용하고 촉진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다른 한편, 최근 장성택 숙청 사건이 다소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전반적 경제정책에 큰 변화가 나타날 조짐은 보이지 않지만, 대규모 숙청 바람이 불 경우 경제·무역분야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사회적 공포 분위기로 인해 비공식 경제활동도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이 경제 건설을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추진한 나머지 개혁과 경제성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공식부문의 투자와 건설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이나 비생산적인 전시성 사업으로 경제적 자원이 낭비되는 폐해가 생길 수 있다. 또 이를 위해 사경제 부문으로부터 재정수입을

정수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경우, 사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북한 당국이 비공식경제를 크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공식경제도 강화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은 중국과 남한 및 기타 외국으로부터 지원을 더 많이 받아내고 대외경협도 더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대중국 광산물 수출이 주요 외화수입원이 되어 주었지만, 중국의 성장 둔화 추세를 감안할 때 광산물 수출을 계속 빠르게 증가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수출산업과 관광업 육성 등으로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는데, 북한의 경제개발구 등 개방 움직임은 이런 현실적 필요성을 반영한 정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력 건설’을 계속할 경우, 남북관계 및 대외관계도 계속 경색될 수밖에 없으며, 남북경협만이 아니라 북·중경협 확대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2014년에 북한이 대외정책을 변경하여 경제적 돌파구를 열려고 할지, 아니면 현상유지에 만족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김석진 북한연구센터 연구위원

다. 사회동향

2013년 북한 사회 부문의 특징은 주민 통합을 통한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 기반 구축, 제한적 국제교류 시도, 외부 문화 차단을 위한 주민 통제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김정은 지배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주민 통합의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김정은 이상화 작업, 주민편의·문화시설 확충과 김정은의 민생행보, 과학기술 성과 홍보와 체육강국

건설 노력을 통한 국가적 자부심 고취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13년, 북한 당국은 유일사상 10대원칙 개정, 김정은 기록영화 제작, 김정은 우표 발행 및 배지 제작·배포 등을 통해 김정은의 정통성과 계승성을 부각시키고 김정은 중심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 한편,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표현을 부각시키면서 민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김정은이 주민편의시설 및 주택단지 건설 현장을 여러 차례 현지지도하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선전함으로써 김정은의 주민 친화적 리더십을 부각시키고 있다. 북한은 2013년 초 신년사에서 “인민이 문명한 환경에서 문화생활을 누리는”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에 계속 박차를 가할 것을 강조하고, 평양시 단장사업 및 전국적 문화시설 건설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평양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주민편의시설 확충 사업을 전개하고, 정치선전을 통하여 민생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상을 부각시킴으로써 김정은 체제의 지지기반 공고화를 도모하였다. 평양에서는 문수물놀이장, 미림송마구락부, 옥류아동병원 및 류경구강병원의 신축과 평양체육관 리모델링이 진행되었고, 남포, 원산시 등지에서도 롤러스케이트장, 동물원 등의 건설과 개축사업이 진행되었다. 평양 시내에는 핸드드립 커피전문점, 24시간 영업 약국, 대동강 유람선 식당, 4D 영상관, 골프연습장, 분수공원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이 등장하였다.

과학기술과 체육 부문의 활동과 국제적 성과도 젊은 지도자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강성한 국가이미지 과시와 이를 통한 사회통합력 제고로 연결되었다. 2012년 말 광명성 3호 발사와 2013년 2월 3차 핵실험에 기여한 과학자들에게 포상과 훈장을 수여하고 평양에서 대규모 환영행사를 개최하여 과학기술과 핵·경제 병진노선의 타당성을 선전

하였다. 과학자들을 “따라 배울 것”을 전사회적으로 독려하고, 11월에는 3년 8개월여 만에 과학자·기술자대회를 개최하여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과학자, 기술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김정은이 김일성종합대학의 과학자아파트와 평양 교외의 은하과학자주택단지 조성 현장을 현지 지도하는 모습을 통해 과학자 우대 정책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체육강국 건설을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주요 사업으로 삼아, 체육시설 건립, 국제 체육교류 활성화, 우수선수 육성 등 체육분야의 투자를 강화하였다. 북한은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기록한 데 이어, 2013년에도 탁구, 역도, 축구, 유도, 태권도 부문의 각종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또한, 2013년 한 해 마식령 스키장을 비롯하여 평양 시내 청춘거리 체육촌, 평양체육관, 5월 1일 경기장, 미림승마구락부, 동대원장애자운동관 등 대형체육시설들이 신·개축, 착공되었다. 김정은은 이러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현지도도를 하였다. 특히 김정은은 6월에 “마식령 속도를 창조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호소문을 발표하여, 2014년 초 개장을 앞둔 마식령 스키장 건설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2013년 북한은 주민통합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스포츠교류와 국제관광 확대를 통해 사회·문화 부문에서 제한적인 국제교류를 지속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체육 부문에서는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를 평양에 유치하여 개최하였고, 전 미국 프로농구 선수 로드맨(Dennis Keith Rodman), 일본 이노끼(猪木寛至) 의원, 일본 체육대학 선수단을 초청하고, 평양축구학교 재학생들을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축구유학을 보내는 등 국제적 체육교류에 적극성을 보였다. 장애인올림픽위원회의

정회원으로 승격되고, 북한 여성 체육인이 아시아축구연맹 집행위원으로 선출되는 등 체육 부문에서의 국제화가 한걸음 진척되었다.

또한 북한은 2013년에도 북·중 간 관광협력을 지속하면서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서양인 관광객 대상 투먼-온성 도보 관광, 단동-동립 1박 2일 관광, 연변-칠보산 관광 등 중국과 북한을 연계한 관광상품과 마라톤 대회 관광, 낚시 관광, 미니 골프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상품이 개발되었고, 신의주, 평성시 등도 외국인 대상 관광지로 추가 개방되었다. 북한 주재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과 외국 여행사 대표를 초청하여 관광산업 부문 외자 유치를 위한 관광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또한, 홍콩기업에 평양·금강산 관광 리모델링을 의뢰하고 고려항공의 베이징-평양 노선을 증편하는 등 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기울였다. 체육과 관광 이외의 분야에서도, 에릭 슈미트(Eric Emerson Schmidt) 구글 회장이 방북하여 평양 컴퓨터센터와 인민대학습당을 방문하는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국제적 교류를 지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체육과 관광분야의 국제교류가 확대되는 한편, 교류 확대에 수반되는 외부 문화 유입에 대비하여 사회 내부의 주민통제는 한층 강화되었다. 현재 북한 사회에서는 시장 활동과 중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각종 상품과 문화매체를 통해 외부 문화가 확산되고,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마약, 성매매 등 사회적 일탈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북한 당국은 방송, 출판물, 상품 등을 통한 ‘부르주아 사상문화’ 확산을 적극 경계하고, 특히 청소년에 대한 사상교육 강화를 통해 외부 문화의 영향력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외부영상물 시청과 불법 휴대전화 사용, 일탈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국경연선 지역 집중검열을

통해 탈북자 단속과 감시도 강화하였다. 접경지역 대도시에서 불법 녹화물과 마약 거래 혐의자가 처형됐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2014년에도 김정은 영도체계에 대한 주민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내부 결속력을 다지려는 북한 당국의 노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2년간 김정은의 계승성과 주민친화적 리더십을 부각시키고 통치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창출하려는 노력은 표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평양 중심이기는 하지만 각종 주민편의시설과 문화시설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후조건의 영향으로 곡물생산량이 증가하여 주민들의 식량사정도 개선되고 있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북한 주민의 영양상태도 호전되었다. 국제관계의 급격한 경색과 같은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포전담당제 등 농업개혁이 정착되어 생산성 향상의 유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2014년에는 주민생활의 약간의 개선도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2014년에는 김정은의 통치능력과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한 우상화 및 교양선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3년 말 장성택 숙청을 계기로 김정은 중심의 유일지도체계를 공고화하고 강력한 국가기강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2014년에는 2012년 학제 개정에 따른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되는바, ‘김정은 혁명역사’ 등 김정은 우상화 과목을 개설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에도 주력할 것이다. 김정은의 민생행보를 담은 기록영화나 숙청 인물들의 ‘반당·반혁명 종파행위’를 비난하는 선전물을 지속적으로 제작, 보급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과 지지도를 높이고자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교류도 조심스럽게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기 외국 유학의 경험이 있는 젊은 지도자는 사회·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민감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향이 개혁적인 사회정책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당분간은 관광이나 체육, 정보통신, 과학기술교육 등 일부 분야에서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제한적 국제 교류가 추진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013년 5월에 가입자 200만 명을 돌파한 휴대전화 사용자 증가 등과 같은 북한 사회 내부의 사회적 의사소통 체계의 활성화와 젊은 세대를 비롯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는 이와 같은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외부사회와의 교류 증대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정보와 문화의 유입을 초래하여, 사회내적으로 사상적 혼란과 불안정을 가져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외부 영상물 시청과 사상문화적 일탈행위에 대한 강력한 통제 또한 동반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장성택 숙청과정에서도 언급되었던 부정부패, 마약, 도박 등의 일탈행위에 대한 검열이 간부층과 일반 주민에게로 확대되면서 주민통제는 한층 강화될 것이다.

- 조정아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연구위원

라. 군사동향

북한은 2013년 연초부터 핵실험을 강행하여 대외적 압력을 인위적으로 초래하는 전술적 태도를 보였다. 북한 당국은 핵실험을 하게 되면 유엔 안보리의 국제적 제재가 수반될 것이라는 사실을 역이용한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북한은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게 되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를 그들의 군사적 긴장조성의 핑계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사실상 북한의 이 같은 군사적 긴장조성 시나리오는 2012년에 실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012년 4월 북한은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에 성공하고 이어 몇 달 간격을 두고 핵실험을 강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2년 4월 로켓시험발사가 실패로 돌아가자 핵실험이 2013년으로 연기되면서 군사적 긴장조성 계획 역시 2013년 초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당국은 김정은의 군사적 리더십의 정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군사적 긴장조성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김정은을 미국과의 군사 ‘대결전’을 진두지휘하여 승리로 이끄는 ‘명장’으로 연출하는 작업에 돌입하였다. 북한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을 ‘반미대결전’의 명분을 강화하는 데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시작을 기점으로 하여 북한은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3.5), 남북 불가침 무효화 선언(3.8), 판문점 직통전화 차단(3.11), 1호 전투근무태세 선언(3.26), 남북 간 군통신선 단절(3.27) 등 일련의 전쟁 상황을 연출하였던 것이다. 북한 당국은 정전협정 백지화와 함께 남북한관계를 전시상황으로 선포하고 단·중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가시화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극에 달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황을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⁵으로 선전하였다. 이어서 ‘전면대결전’에

5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을 펼쳐나서게 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 2013.1.24.

‘반미대전’⁶이라는 선전선동을 강화하여 김정은이 강대국인 미국을 직접 상대하는 ‘대결전’을 벌이는 군사최고지도자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부각하였다. 평양 당국은 김정은이 ‘반미대전 결판’ 결정을 직접 내렸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의 조선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지속되어 온 미국과의 대결전에 결판을 내자고 하고 있다”(조선신보 원문자료, 제 005)라든가, “반미항쟁을 새로운 단계에서 설계하고 그것을 끝까지 전개해 나가려는 지도부(김정은)의 의지”(조선신보 원문자료, 제 005)라는 점을 집중 부각하여 김정은을 군사에도 능한 ‘장군’ 이미지로 고착시키고자 하였다. 김정은이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안전 및 대외부문 일군 협의회를 소집하고 지도”(1.26)하였다거나 서해 군부대를 직접 방문지도하는 모습을 부각·선전한 것도 김정은의 최고군사지도자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대내외 협의회의 장면이 상징하듯이 그 중심에는 새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신 령도자(김정은)의 영상이 있다”(조선신보 원문자료, 제 005)고 선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같이 북한 당국은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 핵실험 강행과 한반도 군사적 긴장분위기 조성을 김정은의 새 지도체제 공고화를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강행에 따른 국제적 제재 상황을 ‘반미대결전’ 분위기 창출에 이용한 것이다. 북한 당국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상황을 ‘반미대결전’으로 포장하고 이 같은 ‘반미대결전’에서 김정은 정권이 승리하였다는 상황을 인위적

6 북한 당국은 유엔 결의 후의 전면대결전에서 <비핵화종말>, 반미항쟁의 새단계로 설정했음을 선포, 조선신보 원문자료(제 005), 2013.2.4.

으로 창출해 내고자 하였다. 강대국인 ‘대미항전’에서 김정은의 대담한 군사 지도력의 승리로 포장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김정은이 군사관련 현지도에 집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13년 11월 현재 김정은의 군사관련 현지도는 총 52회로써 2012년의 총 횟수와 같은 정도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⁷ 또한 김정은은 11월에 군대의 ‘보위일꾼’ 회의를 20년 만에 개최하여 실질적인 군 내부 단속에도 열을 올렸다. 군대 내 방첩과 보안을 담당하는 보위일꾼들의 회의는 199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여기에서 김정은은 친히 “주체혁명위업 수행의 역사적 전환기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 보위사업을 더욱 개선·강화 하자”는 서한을 참가자들에게 주었다고 전해진다.⁸ 이와 같이 김정은은 2013년 초부터 군정치위원, 정치지도자원 회의에 이어 군보위원 관련 회의로 확대하면서 군 최고지도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충성 분위기를 다져나가하고자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김정은은 선군정치 세습을 뒷받침하는 군사력 강화 노력도 지속하였다. 북한군은 연초부터 서해와 동해 최전방 부대를 중심으로 사거리가 확장된 개량형 240mm 장사정포를 배치하였고, 하반기에는 4군단 예하 도서 포병부대에 122mm 방사포 50~60여문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NLL에 인접한 태탄 비행장에는 특수부대 병력을 태우고 저고도 침투가 가능한 MI2 헬기 수십 대를 전개해 놓고 있다. 또한 방어적 차원에서 백령도와 연평도 북방 월내도와 무도, 대수압도 등에서는 포병부대 병력이 이동하는 교통로와 포진지에 덮개를

7 『조선일보』, 2013년 11월 11일.

8 『중앙일보』, 2013년 11월 22일.

설치하여⁹ 한국군 공격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작업도 벌여졌다. 특히 김정은이 서해 도서를 3차례나 시찰할 정도로 ‘서해해상 화약고 만들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북한이 군사적 시위가 필요할 때 서해해상을 주로 이용하게 될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더해서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화하는 움직임까지도 보였다. 북한은 영변 핵단지에 있는 5MW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실험까지도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⁰ 5MW 원자로로는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가 생산할 수 있다.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기지에서 장거리 미사일 엔진연소 실험에 사용된 로켓추진체는 장거리 로켓(은하 3호) 개량형 또는 신형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군사적 행위를 통해서 북한 당국은 아직까지 ‘치기 어린’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김정은을 선군정치를 이끄는 ‘천출명장’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김정일이 내세운 선군통치를 위해서는 김정은이 군대를 틀어쥔 정치지도자가 군대를 장악하는 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실제 군대를 지휘·통솔할 수 있는 군사사업에 능한 지도자로 군림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도에도 김정은은 군사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군사 관련 현지도도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동시에 김정은의 군사적 리더십 고착을 위해서 또 한 차례의 한반도 군사적 긴장조성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은 장성택의

9 『경향신문』, 2013년 11월 21일.

10 『동아일보』, 2013년 10월 9일.

숙청을 계기로 체제정화를 위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북한 내부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인위적으로 조성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재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조성에 나설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동시에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위한 준비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한·미 당국을 긴장시키는 방법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도 상존한다.

- 정영태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2. 대외관계

가. 북·미관계

2013년의 북·미관계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나빴던 것으로 평가된다. 2012년 2.29합의가 동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4.13)로 인해 시행도 되기 전에 사문화된 이래, 미국 오바마 정부의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은 더욱 악화되었다. 2.29합의의 내용은, 북한 측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와 핵실험 중단 ▲우라늄농축시설 포함 영변에서의 핵활동 중단 ▲IAEA 사찰 수용 등을 이행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미국 측은 북한에 대해 24만 톤의 영양공급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재선 후 첫 해외순방지로 아시아를 택하였다. 그는 미얀마 방문 시 양곤대학에서 행한 연설(11.19)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나서면 기꺼이 도울 것이라고 하면서 ‘미얀마 방식’을 제안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은 2013년 신년 연두교서(2.12)에서도 반복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핵실험 같은 도발행위는 고립을 더 심화시킬 것이고,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할 경우 안보와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재천명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에 대하여 강경한 대응으로 맞섰다. 2012년 4월에 과학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에 실패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다시 시험 발사(2012.12.12)하였으며 이번에는 성공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1.22). 북한은 미국이 동 제재 결의를 주도하였다고 강하게 반발하였으며, 3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2.12). 북한의 핵실험은 기존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 1874호 및 2087호 등을 모두 위반하는 것이었다. 유엔 안보리는 다시 한 번 대북제재 결의를 추진하였으며, 이번에는 중국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유엔 안보리는 더욱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3.7).

북한은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핵무력건설과 경제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했다(3.31). 또 핵무기를 기반으로 한 군사안보전략 개발, 영변 핵시설 재가동 선언(4.2) 등 ‘핵보유국’으로서의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3차 핵실험 이후 전개된 북한의 군사적 공세에 대하여 미국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참여한 B-52, B-2, F-22 같은 전략 폭격기 및 전투기와 핵 잠수함 등 첨단무기 배치를 공개하고 MD 강화 등을 천명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군사적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대치관계가 지속되면서 북·미 당국 간 접촉은 국무부와 뉴욕의 주유엔 북한대표부 채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양자 간 대화의 재개는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가 관건이었지만,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할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도닐런(Tom Donilon) 국가안보보좌관은 뉴욕 아시아협회 연설에서 ▲한·미·일의 긴밀하고 확장된 협력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 거부 ▲미국 본토와 동맹국 방어에 대한 공약 재확인 ▲미국은 북한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독려 등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4원칙을 제시하였다(3.11). 데이비스(Glyn Davies)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3.7)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강조하면서,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협상을 원한다”고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노선을 배경으로 미국은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향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케리(John Kerry) 국무장관은 ‘약간의 양보-약간의 합의-그 약속의 파기-북한의 핵프로그램 계속 진전’과 같은 과거의 협상 양태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다(10.3).

이에 반해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하였으며 미국과 남한이 한반도에서 ‘핵 선제공격’을 기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핵개발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였다. 또 2013년 하반기에 중국이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외교를 활발하게 전개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 일본 등과 함께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으로 촉구하면서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대미 접근은 중국을 매개로 한 북·미 양자의 입장 전달 등 간접적인 방식이거나 1.5 track 또는 2 track을 통한 접근에 머물렀다. 6자회담 10주년 및 9·19공동성명 8주년을 맞아 중국이 베이징에서 개최한 국제세미나(9.18)에 북한은 외무성의 김계관 제1부상, 이용호 부상 등 당국자들을 파견하였으나 미국과 한국 등은 당국자를 파견하지 않음으로써 북·미 당국 간 접촉이 성사되지 않았다. 베를린에서 열린 북·미 민간대화(9.25~26)에 북한은 6자회담 수석대표 이용호 외무부상, 차석대표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 장일훈 주유엔 차석 대사 등을 보내, 보즈워스(Stephen Bosworth) 전 대북정책특별대표, 갈루치(Robert Gallucci) 전 북·미 핵협상 미국 측 대표, 위트(Joel Wit)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 등 미국의 전직 관료들과 만났다. 이어 런던에서 열린 민간대화(10.1)에 북한 측은 이용호, 최선희 등 6자회담 대표들이 참석한 반면, 미국 측은 보즈워스 전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디트라니(Joseph R. DeTrani) 전 국가비확산센터 소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비공식 세미나에서 북한 측은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 참여자들은 오바마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는 없었다.

한편 북·미 당국 간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미국인 케네스 배(Kenneth Bae)의 석방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북한은 8월 말 미국 고위관리의 방북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킹(Robert King) 북한인권특사가 방북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이 초청을 철회함으로써 방북이 무산되었다. 킹 특사는 억류 미국인의 송환을 위해 방북을 계속 추진 중이지만 북한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관광을 위해 10월 하순 방북했다가 북한 당국에 의해 억류되었던 또 다른 미국인 뉴먼(Merrill Newman)을 40여 일 만에 추방형식으로 풀어주었다(12.7).

2014년 북·미관계는 무엇보다도 2013년 11월에 발생한 장성택의 실각 사건에 따른 북한 내부의 정세 상황이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장성택의 실각이 권력 엘리트 핵심 간, 당 핵심부서 간, 또는 장성택 파와 군부를 포함하는 반장성택파 간의 갈등의 결과라면, 북한은 2014년의 상당 기간 동안 내부체제를 단속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미관계는 당분간 크게 신경을 쓰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 또한 북한 정세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북한의 정세 변화가 미칠 영향

을 평가하면서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북한 군부가 내부 문제를 단속하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하여 대비를 강화할 것이다.

북·미 양자 간의 현안을 중심으로 보면,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위한 사전조치의 우선 추진을 촉구하는 기존의 입장을 당분간 견지하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다. 북한이 6자회담의 무조건 재개를 주장하더라도 미국은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한국, 중국, 일본 등과의 정책협력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추가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는 경우를 지속적으로 경계하면서 북한에 대해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할 것이다.

- 박영호 통일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나. 북·중관계

2013년의 북·중관계는 기존 전통우호협력관계에 대한 조정을 시도한 해로 평가된다. 특히,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비핵화를 강조하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참여한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로 평가된다. 이처럼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중국의 대북정책이 조정되자, 양국관계에도 균열이 발생했다. 그러나 체제안착과 민생건설에 중국의 외교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북한은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관계 회복을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양국관계의 협력수준도 재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8차 당 대회(2012.11)와 12기 전국인대(2013.3)를 통해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2012.12.12)에 이은 3차 핵실험을 단행(2.12)하고 대남 위협을 통한 ‘판 흔들기’ 전략을 구사하는 한편, 4, 5차 핵실험 연내 실시(2.15), 정전협정 일방 폐기(3.6), 핵개발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3.31) 등을 잇달아 선언하며 독자적인 행보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위기 고조 행위가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자국의 발전 및 안보이익 침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중국은 북한을 이례적으로 압박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2094호)에 찬성(3.7)하는 한편, 항의 표시로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초치한 사실을 외교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중국은 북한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대북 수출금지 목록을 공개(9.23)하는 등 이전보다 강화된 수준에서 실질적인 대북제재를 수행하였다. 또한 핵보유가 체제안정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개혁·개방만이 경제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며 북한의 병진노선을 비판하였다.

이는 중국이 자국의 부상에 따라 증대된 영향력과 국익을 수호하는 데 이전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중국이 비핵화를 강조하며 대북제재에 동참한 이유는 중국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심을 해소하고 책임대국의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북한으로 인한 미국의 대중 압박 및 한·미동맹 강화를 견제하기 위한 측면과 함께, 핵보유와 벼랑 끝 전술의 무용과 핵 포기 유도, 6자회담 복귀, 북한 변화 유도 등의 대북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었다.

이처럼, 중국의 대북정책이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조정

됨에 따라 북·중관계의 균열도 증폭되었다. 북한의 핵개발·보유를 반대하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6자회담)을 선호하는 중국이 북한을 비핵화의 궤도로 유도하기 위해 압박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립무원인 북한이 중국의 압박과 경고를 수용하면서 양국 간 단절되었던 전략적 소통도 복원되기 시작했다.

북한은 최룡해 특사의 방중(5.22~25)을 통해 양국 간의 이견 조율을 시도했고, 한반도 위기조성 행위 중단에 대한 중국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어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방중(6.18~22/7.2~3)함으로써 북·중 간 외교부문 전략대화를 성사시켰으며, 여기에서 북한은 비핵화 및 6자회담 참가의사를 수용했다. 북한의 김성남 당 국제부대표의 방중(7.2~7)에 이은 중국의 리위안차오(李源潮) 국가부주석을 대표로 하는 당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7.25~28)하면서 김정은과의 면담도 성사되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은 시진핑의 구두친서를 전달(7.25)하고 김정은의 6자회담 지지 발언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중국은 제재유지 속에서 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와 6자회담 참가를 유도하였고,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의 방북(8.26~30)을 통해 6자회담 재개를 모색하였다. 반면, 북한은 한·미·일의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선행조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을 통한 ‘조건 없는 대화 재개’ 주장을 시도했다.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6자회담 1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9.18)에 김계관, 리용호, 최선희 등이 참석한 것도 이의 일환이었다.

중국은 한·미·일과의 연쇄회동을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재 역할을 시도하였고, 우다웨이의 방북(11.4~8)을 통해 6자회담 관련국과 북한의 이견을 조율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중 간의

전략적 소통도 일정 수준 회복되었다. 특히, 북한은 동북아의 긴장을 야기한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11.23)에 대해서도 동조를 표명(11.28)함으로써 북·중 간 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경제분야에서도 양국 간의 협력은 다소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중국의 대북제재가 이전보다 강화됨에 따라 나선 및 황금평 개발을 둘러싼 양국의 협력이 지체되거나 중단되기도 했다. 2013년 9월까지 북한의 대중 식량 수입도 17만 4천 톤으로 전년(40만 1천 톤)보다 57% 감소한 점도 이를 방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경제교류는 커다란 변화 없이 대체로 유지되었다. 2013년 9월까지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약 21억 달러로 오히려 전년 대비 9.4% 증가하였으며, 대중 수입액도 약 2억 달러로 전년대비 0.8% 증가하였다.

그러나 북·중경협을 총괄 책임자인 장성택의 처형(12.12)과 이에 따른 북한의 후속조치는 2013년 하반기부터 회복되던 북·중관계의 진전에 커다란 과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물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북·중관계에 근본적 전환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북·중 간의 경협과 소통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이 김정은 정권의 안정과 체제결속을 위해 대남 도발 등 긴장 조성을 추구할 경우 북·중관계는 다시 긴장과 협력을 반복하는 진통을 겪을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자국의 체제를 결속시키는 데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적절한 긴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의 수단으로서 핵무기의 활용가치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이 4차 핵실험과 같은 ‘판 흔들기 전략’을 구사할 경우, 북한 체제의 유지와 6자회담 재개를 통한 안정관리를 추구하는 중국과 적지 않은 마찰을

보일 것이다. 2014년에도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안정된 북한이 자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개혁·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을 유지할 것이며, 이를 위해 중국은 대북제재의 적절한 유지를 통해 북한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통제·유도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안정관리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을 설득·압박·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북한과의 전략적 소통 강화를 통해 북한의 대남 비방 및 도발을 억제하고 4차 핵실험 방지,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6자회담 복귀를 종용할 것이나, 북한 체제 유지에 필요한 경제교류와 지원을 지속할 것이다. 북한은 경제발전과 민생건설에 필수적인 중국의 협조를 획득하기 위해 중국의 요구를 일정 수준 수용하면서 대내외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14년 하반기의 북·중관계는 상반기에 비해 다소 회복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14년의 북·중관계는 각자의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갈등의 잠재 속에서 협력 수준을 조정하는 과정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병곤 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다. 북·일관계

북·일 간의 주요 현안은 일본인 납치문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과거사 문제의 배상 및 보상 등인데, 아베(安倍晋三) 총리의 대북 입장은 강경한 편이다.

특히, 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하여 초강경 입장을 나타

내왔는데, 총리 취임 직후, ‘납치 피해자 가족회’와의 면담(12.28)에서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고, 첫 ‘국회 소신 표명 연설(1.28)’에서도 최대의 현안인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을 역설하였다. 아베 총리는 ▲납치 피해자 전원의 안전 확보 및 즉시 귀국 ▲납치에 관한 진상 규명 ▲납치실행범의 인도 등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을 표명하였다. 납치 피해자 ‘전원이 생존’해 있다는 전제 아래 즉시 귀국을 요구했던 제1차 아베 정권(2006~2007)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현실적 조건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국회 소신 표명 연설(1.28)’ 전날(1.27)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김정일이 일본인 납치 작전에 직접 관계가 없음”을 언급하고, 나아가 민영방송인 TBS 프로그램에 출연(5.29)해서 “일본인 납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 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납치 행위와 관계가 없음”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는 매우 주목되는 부분이다. 아베 총리가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 향후 김정은 정권과 교섭할 수 있고, 북·일 정상회담도 개최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은 기존의 ‘대화와 압박’ 전략기조를 유지하면서, 한편에서는 미·일 공조를 기반으로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해 제재를 가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화과 교섭’을 전개하였다.

먼저,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아베 정권의 강경 대응을 살펴보면,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2.23)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강력 대응 ▲유엔 대북제재안 마련에 대한 협력 등에 관해 합의하였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해 북한의 금융·무역 등 경제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결의안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3.7)하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아울러, 일본의 독자적 대북제재의 조치로써 2013년 4월 13일에 만료되는 제1차, 제2차 핵실험 이후 취해진 일본의 대북제재 조치를 2년 연장할 것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아베 정권은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화 와 교섭’을 전개하였다. 즉, 아베 정권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제3차 핵실험 등에 대한 ‘압박과 제재’의 전략을 추구하면서도, 김정은이 일본인 납치 작전에 직접 관계가 없음을 언급하면서 북한과 접촉하며 교섭을 시도하였다.

아베 정권은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치마 이사오(飯島勳) 내각 관방 참여(총리 자문역)를 방북(5.14~17)토록 하여 김영일 노동당 국제비서와 회담(5.15),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과 회담(5.17)을 갖도록 하였다. 북한은 이치마 이사오 내각관방 참여를 총리 특사로서 예우하였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치마 이사오 내각관방 참여와 일본인 납치문제, 북·일교섭 회담의 재개, 식민지 배상 등 국교정상화에 관련된 핵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일본의 독자적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치마 이사오 내각관방 참여의 방북과 북한, 일본의 접촉은 국내외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이후, 이치마 이사오 내각관방 참여는 베이징에서 북한 측과 접촉 및 교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 아베 정권은 북·일관계의 소강상태를 돌파하기 위한 단초를 만들기 위해 몽골을 매개로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의 경매 문제’를 전략

적으로 활용하는 시도를 하였지만, 아직 북·일관계에 개선의 조짐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게다가, 6자회담의 재개와 관련, 북한과 중국의 ‘선(先) 조건 없는 대화, 후(後) 조치’ 요구에 대해 일본이 한·미·일 공조체제에 따라 ‘선(先) 진정성 있는 조치, 후(後) 대화’로 대응하면서, 북·일관계는 소강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향후 북·일관계의 진전도 매우 불투명하다. 중국의 일방적 ‘방공 식별구역’ 선포로 인해 ‘중국 대 미국, 일본’의 갈등이 초래되면서 6자 회담의 재개가 한층 불투명해지는 등 동북아 전략환경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정권이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북 접촉과 교섭을 시도하더라도, 대북정책은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추진되므로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중국 변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북·일관계의 진전은 한계가 있다. 즉, 북·일관계는 동북아 전략환경과 미·중관계, 미국의 대북전략, 남북관계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자적 수준만의 관계 진전에는 그만큼 한계가 있다.

- 배정호 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라. 북·러관계

2013년 북·러관계는 3차 핵실험 및 이로 인한 대북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참여 등 부정적 요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협력은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다. 2012년 9월 러시아는 110억 달러(약 12조 원)에 이르는 북한의 러시아 채무조정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는 북한이 지고

있는 대러 채무의 약 90%를 삭감하는 것을 의미했다. 러시아의 채무 조정은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북한에 대한 현실적 선택이라는 점과 아울러 지속적인 영향력 행사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2013년 2월 북의 제3차 핵실험으로 3월 유엔 안보리는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인 2094호를 채택했다. 7월에는 북핵 관련 대외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러시아를 방문했으며, 9월에는 나진-하산 철도 구간이 개통되었고, 나진 제3호 터미널은 공사 중에 있다.

2012년 막대한 금액의 채무조정을 해주며 대북 영향력 확대에 적극적이었던 러시아의 입장에 제동을 건 것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었다. 러시아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안정을 보장해 주면서 평화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러시아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푸틴(Vladimir Vladimirovich Putin)을 포함한 러시아의 고위인사들의 입을 통해 여러 차례 천명되었다. “북핵에 대한 제재와 대화는 병행되어야 하며 압박과 제재는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러시아의 입장은 2013년도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지속되었다.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을 핑계로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군사력 확대 움직임을 더 경계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을 명분으로 미국이 한국을 미국 미사일방어망 안으로 편입시키거나 한·미 및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형태의 동북아에서의 군사력 확장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북핵문제의 대외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김계관 외무성 제1차관의 전격적인 러시아 방문과 블라디미르 티토프(Vladimir G. Titov) 외무부 제1차관과의 회동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입장 조율과 러시아의 지지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3년 하반기의 경우 북·러관계는 조용하지만 실질적인 경제협력 행보를 보였다. 북한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한국전 정전 60주년 기념식(7.27)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그러나 9월의 경우 2008년부터 러시아가 투자하여 진행해 온 나진-하산 철도 구간 개보수 완공식이 성대하게 치러졌고 러시아와 북한 양측은 이 사업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를 계기로 11월 예정된 한·러 정상회담에 맞추어 한·러 간 한국회사들의 러시아 측 지분 인수에 대한 접촉이 시작되었다. 박의춘 외무상은 주 북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열린 양국 수교 65주년 기념식(10.11)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러시아와의 우호 및 협력 관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언급을 했다. 박 외무상은 “올해만 해도 양국 외무성의 정치적 대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됐고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연결하는 철도 구간 개보수 공사 완료 기념식이 열렸으며 최근 열린 평양 학생 대상 러시아어 경연대회는 양국 청소년들의 상호 이해를 증진 시켰다”며 여전히 양국 간의 선린우호 관계가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나진-하산철도 연결 및 나진항 사업 등으로 2014년 북·러관계는 전반적으로 활성화 될 것을 보인다. 중국 주도의 6자회담 재개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외적 환경 역시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14년에도 러시아의 대북정책은 북핵 불용, 6자회담의 재개 노력, 그리고 경제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실용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러시아는 한국의 러시아 대북사업 지분인수를 계기로 한국이라는 새로운 파트너를 끌어들이며, 대북관계에서 정치·

경제적 차원에서 모두 실리를 추구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 조한범 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3. 대남동향

2013년 북한의 대남정책은 전통적 강온 양면 대응전술을 지속하면서, 남북관계 및 회담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하였다. 첫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주시하다 3차 북핵실험 후 박근혜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대한 맞대응으로, 공격적 도발 및 발언의 수위를 높여 갔다. 둘째, 개성공단 가동중지 후 강경 전술을 펼쳤으나, 5월 최룡해의 방중 후 남한의 대화 제의를 전격 수용하여 개성공단을 재가동하였다. 셋째, 이산가족 상봉 합의 등 온건 전술을 펼쳤으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 ‘리설주 추문관련 의혹 보도’ 등을 빌미로 상봉을 연기하고 담론수위에서 수사적인 대남 공세를 본격화하였다.

북한은 강온 양면전술로 남한 당국을 혼돈 시키면서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정치경제 상황을 비판하며 남북관계를 주도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1970년대 이래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밀고 당기기는 지속적인 대남 전술이나,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이후 그 강도가 높아졌고 변화주기도 빨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미사일 발사(2012.12) 이후 김정은 정권 집권 2년 차인 2013년, 대남 정치군사적 긴장조성 수위가 높아지고 강온 양면전술의 정책 전환주기가 빨라진 특징을 보인다.

가. 대남 동향의 국면 구분

대남 동향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주요 정책 국면과 긴밀한 상관성이 있는바, 2013년을 관통하는 북한의 대남정책 국면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사일 발사 국면으로 2012년 10월~2013년 1월이다. 국방위 대변인 성명서로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비난(2012.10.9)하며, 일본·괌·미국 본토 또한 북한군의 명중 타격권에 있다고 위협하였다.¹¹ 그리고 광명성 3호 발사(2012.12.12) 이후 북한의 과학기술능력을 대대적으로 선전한 시기이다.

둘째, 3차 핵실험 국면으로 2013년 1~2월에 해당한다. 조평통 성명서로 UN 안보리 결의 2087호에 대해 “남조선괴뢰패당이 이번 결의 조작놀음에 앞장섰다”며 “남북비핵화 논의 중단”,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 등으로 위협(1.25)하였다.¹² 그리고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로 3차 핵실험 성공을 발표(2.12)하였다. 이어 『노동신문』 보도(2.14)를 통해 3차 핵실험 제재 동향과 한·미 군사훈련 등에 대해 “북을 겨냥한 핵선제 공격 훈련”이라며 핵실험보다 더 한 것도 할 것, 강도 높은 2·3차 대응으로 연속조치를 취할 것 등을 발표하였다.

셋째, 긴장조성 고도화 국면으로 2013년 3월이다. 북한군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중대조치를 발표(3.5)하고 정전협정백지화를 선언하는 등 전격적 긴장고조, 전투태세, 군사적 조치와 행동이 두드러진 시기이다. 이 시기 북한은 이전의 대남 정치군사적 긴장 조성을 했던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며 군사적 긴장도를 높였다.

넷째, 긴장조절 국면으로 2013년 4~5월이다. 군사적 돌발 행동보다는 도발위협 담론 중심의 조치와 행동이 두드러진 시기이다. 3월의 극단적 긴장조성 후 핵보유 국가로서의 위상을 대남 및 국제사회에 암묵

11 『조선중앙통신』, 2012년 10월 9일.

12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25일.

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대외협상을 모색하고 시도한 시기이다. 더불어 남북관계 및 ‘대외관계의 핵의제 관련’ 주도권을 잡기 위한 협상의 밀고 당기기 양태를 보였다.

다섯째, 긴장완화 국면으로 2013년 6~9월이다. 5월 말 최룡해의 방중 이후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이산가족·금강산관광 논의 등이 전개된 이산가족 상봉행사 취소 이전까지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조율 속 대남비방 국면으로 2013년 10~12월이다. 12월 장성택 처형으로 외현화된 내부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대남 정책에 방향이 정치적 수사를 중심으로 한 원색적 비방 선전으로 바뀐 시기이다. 이산가족 상봉 취소를 발표한 9월 21일부터 남한 정치에 대한 담론적 공격을 지속하며 향후 정책을 모색하는 2013년 12월 현재 까지이다.

나. 2013년 대남정책 특징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대남 강은 양면정책의 수위상승과 전환속도가 빨라진 점이다. 세부적 대남정책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강경책을 구사했으나, 일관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막혀 목적 달성에 실패하자 유화책으로 전환하였다. 초기 북한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실체를 알기 위해 박근혜정부 비난을 자제하였다. 그러나 핵실험에 대한 강경한 대응 및 미·중과의 연대 대응 이후, 개성공단 일방적 잠정 폐쇄 및 박 대통령 실명비난(5.25 이후) 등 강공책을 동원하였다. 그리고 강공책이 통하지 않자 남북당국대화를 수용(6.6)하여 국면전환을 시도하였다.

둘째, 대남 온건국면에선 남북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밀고 당기기 지속,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등 현안에 대한 협상 의지를 표명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성공단 남북당국 실무회담 7차례 개최(7.6~8.14), 7차 회담에서 공단중단 재발방지와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방안 합의(8.14),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개최 등으로 제도 개선 방안 및 재가동 일정 등 협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실무회담을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8.18) 등이다.

셋째, 남북당국대화를 대북지원 등 물질적 보상과 연계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대화 국면에서 진행될 각종 행사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간접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이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에도 해당되었다.

넷째, 대화국면에서 물질적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매개자 역할이 가능한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 채널도 가동하였다. 구체적으로 남북 불교계 접촉(8.17~22, 중국 심양), UN Youth Leadership Program (YLP) 참가(8.22~9.3, 전남 광주), 아시아클럽 역도 선수권 대회 남한 선수단 초청 참가(9.12~17, 평양) 등이다.

다섯째, 이산가족 상봉 관련 밀고 당기기이다.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합의를 채택하였다(8.23). 주요 합의 내용은 9월 25~30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남북 각각 100가족) 및 10월 22~23일 화상상봉 실시(남북 각각 40가족)이다. 그러나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 정부가 남북대화를 동족대결에 악용하고 있다며 연기를 통보하였다(9.21).

여섯째, 실명 비난을 포함 박근혜정부에 대한 비난은 9월 이후 급증하였고 10월 들어 일상화되었다. 그리고 11~12월 초 각종 북한단체

명의로 매일 대남 선전선동을 공세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일곱째, 남북 체제경쟁의 일환으로 재입북한 탈북자를 이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재입북을 유도하고 있다. 재입북 탈북자에게 ‘김정일 광폭정치’를 원용하여, “1%의 양심을 믿어야 한다”면서 각종 혜택 제공 등 관용정책을 과시하고 있다. 또한 재입북 탈북자의 방송출연을 통해 북한주민들에게 대남 비방·흑색선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다. 평가와 전망

2013년 북한의 대남정책은 전통적인 강온 양면 이중정책을 구사하고 있으나, 그 군사적 긴장조성의 수위와 강도가 강화되고 정책 전환의 시간도 짧아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2013년 최룡해 방중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이 전체적으로 온건 방향으로 선화하였으나, 세부 협상 시 정책 변동성이 크고 변화주기도 짧은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전체적으로 2013년 상반기에 비하여 2013년 하반기의 대남 온건정책 방향의 국면을 바꿀 정도의 사안은 아니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정책 변동성이 불안정성으로 나아간 상태에서 발생하여 다시 강경국면으로 전환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다음으로 북한의 남북관계 주도권 약화이다.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시도한 대남 강경정책이 남한 주민의 대북 민심 이반을 초래하였다. 핵개발 및 각종 대남 도발로 남한 국민들의 대북 불신이 전반적으로 증대하였다. 또한 한국이 한·미동맹 강화와 한·중 전략적 협력 외교로 북한의 대북 ‘통미봉남’ 전술 무력화 및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미세한 변화를 견인하여, 북한의 대남 주도권이 다소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전망 관련하여, 북한은 2014년에도 강공과 유화 혼합 전술로 남북관계의 주도권 장악을 시도하고, 대북지원 정책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 관련하여 북한은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를 논하면서 시간 끌기 전술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의도뿐 아니라 긴장된 동북아정세 상 당분간 회담 재개 전망은 낮으며, 회담이 재개되어도 북한은 북핵의제를 피하고 ‘세계 핵군축’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대남정책 관련하여,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관철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은 북한군에서 적군(敵軍)을 와해하는 공작 업무와 대남 심리전 등을 담당하는 요원인 적공(敵攻) 간부들을 불러 모아 대대적인 격려 및 치하를 하는 제4차 군 적공일꾼 열성자대회를 지도(11.12)했다.¹³

이 대회 상황과 최근 북한동향을 볼 때, 2014년 대남정책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한편 대남 통일전선전술 등을 통해 한국의 정책을 비판하고 남한 정치권과 사회에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설파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강온 양면정책의 지속이다.

주목할 점은 북한 내부의 복잡하고 불안정한 정책결정 메커니즘이 투영될 대남정책에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점이다. 북한 정권이 대남관계의 개선을 위한 국면 전환을 시도해도, 그 정책의

¹³ 이 대회에서 소위 적공일군들은 김정은 결사옹위의 맹세와 결의를 다졌다. 『노동신문』, 2013년 11월 12일.

지속성 또는 주기성을 어떻게 예측하고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 박영자 북한연구센터 부연구위원

Ⅲ

남북한관계



1. 남북대화

가. 남북당국대화 시도와 무산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3~4월 북한의 전쟁위협 등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마리를 찾기 어려웠다. 더욱이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으로 남북관계는 얼어 붙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개성공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대화가 모색되었다.

개성공단이 잠정폐쇄된 후 남북한은 서로 책임전가를 하며 명분 쌓기에 주력하였다. 개성공단이 남북한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이 있으며 공단폐쇄는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을 어렵게 한다는 부담이 남북한 모두에게 있었다. 남한 내부에서는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우선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개성공단의 전면 폐쇄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도 대두하였다. 또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개성공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담화를 통해 6·15를 계기로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남북 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전격적으로 제안하였다(6.6). 그동안 남한의 실무회담 제의를 거부한 북한이 왜 남북당국회담 개최를 제안했을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키 리졸브 훈련이 종료됨에 따라 남북 대화를 시도할만한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또한 북한은 당국회담을 거부하고 기업인의 선별적 방북을 허용하려고 했으나 별 효과가 없자 당국회담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5,400명 북한 근로자의

실직 등 사회적 문제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을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이 공단재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신들의 정세판단에 따라 그 시점을 택한 것이다. 북한이 당국대화를 제안한 시점(6.6)을 보면, 미·중 정상회담(6.7~8)을 앞두고 남북대화를 수용하는 평화적 이미지를 보일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에도 북한은 국제요인을 고려해 남북대화에 응한 선례가 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시 카터 전 미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였을 때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을 수용하였다. 또한 미·중 정상회담(2011.1)에서 남북 대화, 북·미대화, 6자회담 재개의 방침이 논의된 뒤, 북한은 남북고위급 군사실무회담(2011.2)에 응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룡해 특사의 방중(5.22~24)을 통해 중국 측에게 북한의 입장을 설명함으로써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북 압박 완화를 위한 정지작업을 하고자 했다. 이렇게 보면 북한이 남북당국대화를 전격 제안한 것도 미·중 정상회담을 겨냥한 평화제스처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한편 북한이 당국회담을 제안한 시기를 보면 6·15공동행사를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남북당국대화를 거부하면서도 민간단체에 ‘6·15공동행사’ 개최를 제안(5.22)하였다. 북한은 민간단체와 6·15공동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남북경협이 과거 관행을 되살리고 이를 계기로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압박하고자 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6·15남측위원회’의 방북 신청을 불허(6.2)함에 따라 북한은 남북당국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북한은 조평통 담화에서 “6·15를 계기로…”라는 표현을 앞세움으로써 6·15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한 북한은 남북당국대화를 위한 실무회담에서 6·15 공동선언 기념 민간행사를 의제로 제기하였으며, 북측 회담대표로

통보된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장은 학생·민간단체 교류 담당 경력을 지닌 사람이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6·15의 시점을 염두에 두고 남북대화를 제안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북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6.9~10)에서 남북당국회담 개최(6.12~13, 서울)가 합의되었다. 남북당국회담은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고 남북 간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또한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고조되었던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국면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수석대표의 격(格)과 의제에 대한 입장차이로 남북한은 각기 별도의 발표문을 발표하여 회담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을 예고했다. 남한의 발표문에 의하면 의제는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문제 등 당면하게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었다. 반면 북한 측 발표문은 이러한 의제에 추가하여 6·15 공동선언 및 7·4공동성명 공동 기념문제, 민간왕래 및 접촉, 협력사업 추진문제 등을 포함하였다. 남한은 남북 현안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에 중점을 둔 반면, 북한은 6·15공동선언에 대한 의미부여, 공동행사, 왕래 확대, 대북협력사업 논의 등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북한이 인적 왕래 및 접촉, 협력사업 추진 등을 의제에 포함한 것은 5·24조치의 해제를 겨냥한 것이었다.

한편 남북회담 수석대표의 지위에 대해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였다. 남한은 수석대표를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 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라고 명기한 반면, 북한은 “상급 당국자”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남북대화의 명칭도 남북장관급회담이 아니라 남북당국회담이 되었다. 남북당국회담을 하루 앞둔 6월 11일 회담

대표단의 명단이 교환되었다. 남한의 대표단은 김남식 통일부차관 등 5명이고, 북한 측 대표단은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 등 5명이었다. 북한은 자기 측 대표가 장관에 해당하는 상(相)급이라고 주장하고 남한의 수석대표가 장관급으로 교체되지 않으면 남북당국회담이 열릴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하고 대표단 파견을 보류하였다.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됨에 따라 남북관계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다는 현실에 다시 직면하게 되었다. 남북회담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 남북회담 대표의 격(格)문제는 해묵은 문제이다. 과거에도 북한은 남북장관급회담의 대표로 실질적으로 장관급보다 직위가 낮은 인물을 선정하였다. 북한은 남한의 통일부에 해당하는 부처가 없으며 자신들의 직위체계가 남한과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자를 남북대화의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남북대화를 국제관례에 따르지 않고 통일전선 차원에서 대응해왔다. 북한은 남북대화의 상황에 따라 임의로 남북대화 책임자의 격을 조정하였다. 북한의 정부기구인 통일부와 같은 기구가 없는 대신 노동당 비서국의 대남담당 비서가 통일문제를 전담한다. 그리고 비서국 산하 기구인 통일전선부는 대남사업과 함께 국제적으로 사회주의 세력과의 통일전선사업을 주도한다. 통일전선부의 지휘를 받는 외곽단체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아태평화위원회, 민족화해협의회 등이 남한정부와 민간단체를 상대로 통일전선사업을 한다. 김양건은 대남담당비서이며 통일전선부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대남사업과 해외사업을 총괄한다. 따라서 김양건 대남비서가 통일부장관의 대화 상대자가 되는 것이 회담의 격이 맞다. 그러나 북한은 과거에 조평통 서기국 1부국장인 김령성과 권호웅에게 내각참사라는 직함을 주어

남북장관급회담의 대표를 담당하게 했다. 북한은 대남비서가 남북대회에 나선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1994년 6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예비접촉에서 김용순 대남담당 비서가 이흥구 부총리 겸 통일부장관을 상대한 적도 있다.

박근혜정부는 남북대화를 정상화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남북한이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남북 대화 책임자의 격(格)을 맞추는 것은 남북관계의 신뢰를 쌓기 위한 시발점이라고 보았다. 회담의 격의 문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의전 문제만은 아니다. 회담의 최고대표가 어떤 지위에 있는가에 따라 회담의 수준과 내용이 달라진다. 같은 의제를 다루더라도 회담 대표의 지위에 따라 논의의 수준, 합의내용, 후속조치가 달라진다. 이렇게 볼 때 회담의 격을 맞추는 것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형식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회담의 내용을 결정하는 실질적 문제이다.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표면적 이유는 회담 대표의 격을 둘러싼 논란 때문이었다. 그러나 회담제안(6.6)부터 회담개최(6.12)까지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서 남북한이 입장을 조율한 시간이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 북한은 과거 관행의 복원을 시도한 반면, 박근혜정부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원칙을 수립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회담의 형식 및 절차에 대해 남북한의 입장이 대립하였지만 남북 간 우선적 논의가 필요한 의제를 조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 남북관계의 현안으로 개성공단문제, 금강산관광문제, 이산가족 등 인도주의문제를 선정함으로써 향후 어떤 식으로 남북대화가 재개되든지 이 문제들을 중심으로 남북대회를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

나. 개성공단 실무회담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후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숨고르기와 탐색전이 뒤따랐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완화, 북·미대화 여건 조성, 중국 등의 남북대화 권고 등을 감안하였을 때 남북대화를 다시 모색할 필요성이 있었다. 박근혜정부는 개성공단문제의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의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해 대화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다.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후, 한·중 정상회담을 거친 후 남북대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가 시작되었다.

여러 가지 남북 현안을 다루기 위한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됨에 따라 분야별 실무회담을 하는 각개전투식 방안이 시도되었다. 이번에는 남한이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제안(7.4)하고 이후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개최(7.6~7)되었다.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는 ① 7월 10일부터 개성공단의 설비점검 및 정비 ②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③ 차량의 통행·통신, 인원의 안전 복귀 및 신변안전 보장 ④ 7월 10일 후속회담 개최의 네 개 항이 합의되었다.

개성공단 실무회담(7.10)에서 우선 완제품의 반출과 시설점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국은 기업 피해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방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개성공단에 외국기업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국제적 규범에 따라 투자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반면 북한은 6·15공동성명의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남북 간 경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북한은 설비점검 및 정비를 조속히 끝내고 공단을 재가동 할 것을 제안하였다.

2차 개성공단 실무회담(7.15)에서도 재발방지 및 발전적 정상화를 우선시하는 남한의 입장과 공단정상화를 우선시하는 북한의 입장은 평행선을 유지했다.

그리고 7월 12일부터 개성공단 기업의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이 진행되었다. 우선 전기전자·기계금속 분야 기업부터 시작하여 시차를 두고 섬유·봉제분야 기업이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완제품·원부자재를 반출하였다.

7차 개성공단 실무회담(8.14)에서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방지,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한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특히 개성공단 왕래 인원의 신변안전 보장, 기업의 투자자산 보호, 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외국기업 유치,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 활동 보장, 안전한 출입·체류 및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합의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에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분과위원회가 다루는 의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와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가 병행해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출입체류 분과위원회’와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가 병행해서 개최되었다.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는 1차 회의(9.4), 2차 회의(11.13)에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투자 유치 방안, 역외가공지역 인정, 국제적 수준의 제도개선 등에 대해 실무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는 1차 회의(9.4), 2차 회의(11.13)에서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문제를 중심으로 협의하였다.

그리고 ‘출입·체류 분과위원회’는 1차 회의(9.5), 2차 회의(9.13), 3차 회의(9.26), 4차 회의(11.14)에서 위법행위 발생 시 입회조사, 조사 시 기본권 보장 등이 포함된 출입·체류에 관한 부속합의서(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였다.

또한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는 1차 회의(9.5), 2차 회의(9.13), 3차 회의(11.29)를 개최하여 1일 단위 상시통행,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선별검사, 인터넷 및 이동전화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3차 회의에서 1일 단위 상시통행을 실시하기 위한 전자출입체계(RFID) 공사의 12월 첫째 주부터 개시, 인터넷 연결 등을 위한 통신분야 실무접촉, 군 통신분야 실무접촉 등이 합의되었다.

다. 이산가족 상봉 회담 및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의 결렬

북한은 금강산관광 재개 및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별도의 실무회담을 전격 제안했다(7.10). 북한은 남북 현안에 대해 동시다발적 회담을 개최하여 남한의 회담 역량을 분산시키고 핵심의제의 초점을 흐리게 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정부는 인도적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산가족 실무 회담을 수용하되, 개성공단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금강산관광 실무 회담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북한도 금강산관광 재개 실무 회담과 이산가족 실무 회담을 모두 보류한다는 입장을 통보하였다.

잠깐 생각기를 거친 후 남한의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제안을 북한이

수용함으로써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었다(8.23). 회담 결과,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금강산에서 진행하고, 쌍방에서 각각 100명씩 상봉을 하기로 합의되었다. 아울러 이산가족 화상상봉(10.22~23), 11월 중 추가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등도 합의되었다. 이에 따라 9월 16일 이산가족 상봉 최종 명단이 교환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며칠 앞두고 대화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될 때까지 이산가족 상봉 및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을 연기한다고 통보(9.21)하였다.

이에 따라 3년 만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이산가족 상봉은 실현되지 못했다. 또한 10월 2일 금강산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정되었던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도 무산되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및 금강산관광 회담을 거부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북한의 표면적 이유는 한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하며 통합진보당 사건으로 북한을 압박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대화를 거부한 실질적 이유는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하더라도 대북지원을 기대할 수 없고 금강산관광 재개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실리적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 전망

박근혜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는 긴장국면을 거쳐 대화국면, 지루한 공방전, 답보상태 등이 나타나고 있다. 남북관계의 이러한 패턴은 낯설지 않다. 북한은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도발, 대화 제의, 대화의 결렬, 재도발의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여 왔다. 북한은 도발을 통해 위협능력

과시와 협상의제 선점의 목표를 달성한 뒤, 대화단계에서 실질적 이익을 도모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뒤 회담결렬 수순을 밟아왔다. 2013년 초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북한은 핵위협 및 대남도발 위협의 단계를 거친 뒤,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그러나 9월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된 후 남북관계는 다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2014년에 이러한 남북관계의 답보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협력모델이 만들어질지 아니면 대화결렬과 긴장재개의 패턴이 반복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2014년 남북관계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 요인과 긍정적 요인이 교차하고 있다. 우선 남북관계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들이 있다. 북한의 장성택의 실각, 대규모 숙청과 인사개편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은 당·정·군에 대한 대규모 숙청을 감행하고 대내적 통합과 안정을 위해서 남북관계의 긴장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또한 2014년 초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구실로 북한이 대남위협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이 2014년 상반기에 또다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경우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에 긍정적 요인을 미칠 요인도 존재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 김정은 체제는 정통성 강화를 위해 인민생활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발전에 대한 국제적 조건은 우호적이지 않다. 유엔의 대북제재가 실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3차 핵실험 이후 중국도 북한과의 교역 및 경험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는 남한이다.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한 것이나 금강산관광 재개에 집착하는 것도 남한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또한 남한도 남북관계 진전의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이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을 위해서는 북한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 남북대화를 통해 이러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동의를 얻을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한편 향후 남북관계는 국제사회의 움직임과도 관련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해 한·미·중 공조의 틀을 마련하였다. 북한은 한·미·중 공조를 와해하기 위해 남북대화를 제의하는 한편, 대중외교 및 대미접근을 시도했다. 남북한과 주변국 사이의 복잡한 외교전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남북한과 미·중 등 주변국을 둘러싼 새로운 판짜기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6자회담 재개를 모색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6자회담, 북·미대화, 남북대화가 앞서거나 뒤서기니 하면서 전개될 수도 있다.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이나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촉 등 실무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지원, 금강산관광 재개 등 현안들이 서로 얽혀 있어서 분리접근 방식에 의해 해법을 찾기 어려운 점도 있다.

이렇게 보면,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 재개, 5·24조치 해제 문제 등 남북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해 특사회담과 같은 고위급회담이 추진될 수도 있다. 고위급회담을 통해 북한에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북한의 비핵화, 인도문제, 경협 등을 포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모색될 수도 있다.

- 박종철 통일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2. 남북교류협력

가. 경제분야

2013년 경제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은 작년과 비교하여 사실상 진전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 남북 간 교류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가동을 잠정 중단함으로써 남북교역의 통로가 일시적으로 차단되기도 하였다. 2013년 10월 말 기준으로 남북교역액은 모두 8.08억 달러로 전년 누계 대비 약 44.5%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반입은 4.4억 달러, 반출은 3.6억 달러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연도별 남북교역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반입	176	272	289	258	340	520	765	932	934	1,044	914	1,074	442
반출	227	370	435	439	715	830	1,033	888	745	868	800	828	366
계	403	642	724	697	1,055	1,350	1,798	1,820	1,679	1,912	1,714	1,815	808

자료: 통일부, 『남북관계 주요 통계』 (2013.11.28).

* 2013년 자료는 1월부터 10월까지 반영됨.

경협사업의 승인과 관련 개성공단에서의 협력 사업은 2013년에 총 3건의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50만 달러 이하의 신고사업은 단 7건만 진행되었다. 한편, 개성공단 승인사업은 누적 통계로 보면 총 302개의 협력사업이 승인되었다.

연도별 협력사업 승인현황

(단위: 건)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경제	민간경협	6	10	4	6	9	1	19	-	-	19	74	
	개성 공단	승인	17	26	15	163	53	10	6	1	6	5	302
		신고	-	-	-	-	-	12	11	18	21	7	69

자료: 통일부, 『남북관계 주요 통계』 (2013.11.28).

* 2013년 자료는 1월부터 11월까지 반영됨.

남북 간 사실상 유일한 경협사업인 개성공단은 2013년 4월 3일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 제한 조치가 있은 후 166일 동안 가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개성공단의 가동기업 수는 9월 말 기준 123개 업체로 생산액은 2월 말 기준 모두 8,056만 달러를 기록했다.

개성공단 가동기업 수 및 생산액 현황

(단위: 개, 만 달러)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가동기업 수	30	65	93	117	121	123	123	123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계
생산액	7,373	18,478	25,142	25,648	32,332	40,185	46,950	8,056	204,164

자료: 통일부, 『남북관계 주요 통계』 (2013.11.28).

* 2013년 자료는 1월부터 2월까지 반영됨.

개성공단 근로자는 2013년 2월 말 현재 북측 53,466명, 남측 788명으로 총 54,254명이 종사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북측 근로자는 3,252명 늘어났으며, 남측 근로자 역시 18명 증가했다.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

(단위: 명)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북측 근로자	11,160	22,538	38,931	42,561	46,284	49,866	53,181	53,466
남측 근로자	791	785	1,055	935	804	776	780	788
합계	11,951	23,323	39,986	43,496	47,088	50,642	53,961	54,254

자료: 통일부, 『남북관계 주요 통계』 (2013.11.28).

* 2013년 자료는 1월부터 2월까지 반영됨.

정부는 개성공단의 가동중단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2013년 8월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671억 5천만 원의 1차 긴급 운전자금 대출 지원을 결정한 바 있으며, 지난 9월에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추가로 5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난 11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미 대출해 준 남북협력기금의 상환을 6개월씩 유예해주기도 하였으며, 상환유예 혜택을 받는 기업은 모두 28개사로 대출규모는 97억 원이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험보험금 반납에 대한 유예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4년의 남북경협 전망은 2013년과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을 놓고 참가국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경제교류협력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11월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비롯한 남·북·러 삼각 경제협력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만큼 우리 기업이 중국 및 러시아 기업의 대북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남북경제협력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기본적으로 핵·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있지만 악화된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고 정권 유지의 차원에서라도 경제난 해결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출범에 따라 기대되었던 남북관계 경색 탈피가 이루어지 못했던 만큼 2014년도에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이전보다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북한이 중국 베이징에서 ‘14개 개발구’ 투자 유치를 시도했다는 점으로 볼 때 남한과의 경제협력에 집중하기보다는 중국과의 경제교류 확대를 통해 경제난 극복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으며, 남한 내에서도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전제로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신중론에 무게중심이 실릴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2014년 전반기에는 북한이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남정책에 있어 다양한 전술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의 변화 등과 연계시켜 큰 틀에서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그동안 중단되었던 금강산관광사업의 재개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오랫동안 경색되어 있었고 남북 간 신뢰회복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남북경제교류의 확대가 2014년도 전반기에 대폭적으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하반기에는 남북경제교류의 확대에 대한 국내외의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남북 간 경제교류협력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협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개성공단 사태 등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중단 후유증으로 인해 남한 내에서 대북경협

추진의 기반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남북한 간 경험사업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협상을 반복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김규륜 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나. 사회·문화교류분야

2013년의 남북 사회·문화교류는 2012년과는 다른 일정 정도의 변화가 예상되었다. 2012년의 사회·문화교류는 정치적 변수에 따라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2012년의 경우 ‘5·24조치’의 영향과 아울러, 김정은 체제 출범에 따라 북한도 내부 안정에 주력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2013년 사회·문화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은 무엇보다 박근혜정부의 출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따라 대북정책에서도 일정 정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아울러 남북 사회·문화교류분야는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언급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하지만 2013년 사회·문화분야의 교류는 예상만큼 진전되지 못하였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이은 무력시위는 2013년 상반기 남북관계 전반을 경색시킨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하반기의 경우 개성공단 사업 재개 협상과 아울러 남북관계 및 사회·문화교류에 있어서 다소간의 변화가 나타났다.

유진벨재단의 결핵약품(6억 7,800만 원 상당)에 대한 대북지원 승인(3.22)은 정부의 남북교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였다. 그러나

북한의 개성공단 출경 차단(4.3)과 한국 정부의 ‘중대조치 발언’ 등 개성공단 위기로 남북관계의 경색이 초래되었다. 그러나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이 개최되면서 남북관계도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인도적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의 방북이 허용되었고 10월부터는 역사단체, 개성공단 실무자 등의 방북이 잇달아 허용되면서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북한의 ‘6·15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에서는 ‘6·15공동행사’를 개성이나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5.22). 그러나 제의 3일 뒤에는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로 한국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했다(5.25). 북한에 대해 정부는 당국 간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의 6·15공동행사 협의를 위한 개성 방문을 불허했다(6.2).

체육분야에서는 방북과 방남을 통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개최되는 가운데 서울과 화성에서 ‘2013 동아시아컵 축구 대회’가 열렸으며(7.20~28), 북한 여자선수단 등 36명이 입국했다. 동아시아컵 축구대회는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시작된 국제 축구대회로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대만 등 동아시아 9개국을 회원으로 2002년 5월 설립되었다.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2013 광주 유엔 국제 유스 리더십 프로그램 (Youth Leadership Program, YLP)’에 북한 청소년 4명이 참석하였다(8.21~9.4). 이 프로그램은 유엔스포츠개발평화사무국(UNOSDP)이 분쟁지역이나 개도국 청년들을 차세대 체육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국제 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이다. 2013년 대회는 아시아 지역 최초로 개최된 대회로 북한 등 19개국 33명의 참가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데 진행되었다.

평양에서는 ‘2013년 아시아클럽 역도 선수권 대회’가 개최(9.12~17)되었다. 한국 측에서 41명의 선수단이 참가를 위해 방북했으며, 특히 평양에서 열린 대회 사상 처음으로 태극기 게양과 아울러 애국가가 연주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추석을 전후하여 남북 이산가족 상봉 및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하였다. 광복절 다음날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을 통한 10만 불 상당의 대북 수해 지원을 결정(8.16)하였다.

종교분야에서의 교류도 성사되었다. 조계종 관계자 22명이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를 거쳐 방북(10.12)하여 ‘신계사 낙성 6주년 기념 남북 합동법회’를 개최하였다. 11월에는 개성 영통사에서 대한불교 천태종과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이 합동으로 낙성 8주년 기념 남북 합동법회를 열었다. 개성 영통사에서는 2007년 이후 2008년을 제외하고 매년 다례제와 낙성 기념법회가 남북합동으로 열렸다. 또한 평양 장충성당 설립 25주년 합동 미사를 위해 12명의 민간단체 방북(11.9)도 이루어졌다.

북한은 통지문을 통해 불법입국 한국인 6명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돌려보내겠다는 입장을 통보(10.24)함으로써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6명 및 유해 1구가 판문점을 통해 인도(10.25)되었다. 10월 26일에는 해군·해경이 기관 고장으로 동해 상에 표류하던 북한어선 1척을 구조하여 27일 북한 측에 인계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재 분야의 협력도 이루어졌다. 개성 만일대 공동발굴조사사업과 관련하여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기획

총괄위원장 등 9명이 개성에 들어가 현장을 조사하고 돌아왔다(11.22).

금강산 방북은 현대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금강산에서 열리는 정몽헌 회장 10주기 추모식 참석을 위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이 있었다(8.3). 금강산관광 15주년을 맞이하여 금강산 현지에서 열린 기념식을 위해 현대아산 임직원 20명이 방북하였다(11.18). 또한 금강산 시설물 점검을 위한 기술진의 방북도 승인되었다(12.2~6).

2014년 남북 사회·문화교류 협력 사업은 6월에 있을 지방자치단체 선거, 9월에 있을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이라는 요인과 북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변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2013년보다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확대를 위한 긍정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9월부터 제7회 인천아시안게임이 시작되며, 2013년에 무산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을 위한 남북 간의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남북 사회·문화교류 전반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문화교류의 본격화에는 북핵문제라는 걸림돌이 있다는 점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신뢰할만한 조치가 있기 전까지 사회·문화분야는 최소한의 교류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2014년 남북 사회·문화협력은 부담이 적고 명분이 확실한 민족공동문화자산 관련 분야와 인도지원과 연계된 분야 및 종교분야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 조한범 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3. 북한인권과 인도주의 사안

가. 북한인권문제

북한은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7.3)하는 등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일부 협력적 태도를 보였다. 또한 장애인보호법과 재판소구성법, 형법을 개정하는 등 북한인권 관련 법률을 정비하였다. 그러나 외무성 대변인의 ‘유엔 인권이사회의 대북 인권결의 채택 전면 배격’ 주장(3.22),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에 대한 거부 등에서 보듯이 북한은 2013년에도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대해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하였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북한인권 공론화와 개선활동이 강화되는 가운데,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유엔 인권이사회(3.21)와 유엔 총회(12.18)에서 북한인권결의가 무투표로 채택되었다.

2013년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에서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를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국내외 북한인권 민간단체 및 세계적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 워치(HRW)와 국제엠네스티(AI)가 1년 넘게 주장해오던 것을 나비 필레이(Navi Pillay) 유엔 인권최고대표(1.14)와 인권이사회 제22차 회기에서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적극 지지하면서 성사되었다. 우리 정부도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담 기초연설(2.27)을 통해 조사위원회 설립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3년 5월 7일 헨첼(Henczel)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은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위원장을 비롯, 소냐 비세르코(Sonja Biserko), 마르주키 다루스만

(Marzuki Darusman)을 북한인권조사위원으로 임명하였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식량권 침해, 정치범수용소 관련 침해,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 자의적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강제실종 등 북한인권특별 보고관이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적시한 9가지의 북한인권 침해 사안을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반인도범죄 성립 여부 규명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완전한 책임(full accountability)’을 규명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당국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북한은 인권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서신(5.10)을 통해 “전적으로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전적으로 협력을 거부하였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에 대한 회담을 요청(6.18)하고, 방북 허용을 통한 현장 방문 요청(7.5), 김정은 제1비서에게 보낸 서한을 통한 협조 요청 및 북한대표의 한국·일본 개최 공청회 초청(7.16) 등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조사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까지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뿐 아니라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전면거부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조사위원회 설립 지지 표명에 대해 “괴뢰패당이 <인권실태조사>니 뭐니 하며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감히 걸고 든 것은 무엄하기 그지없는 특대형도발”이라고 강력하게 반발(3.24)하였다.

북한 당국이 비협조적 자세로 인해 현장방문 조사가 어려워지면서 북한 당국의 비협조로 현장방문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조사위원회는 한국(8.18~27), 일본(8.27~31), 태국(9.18~20), 영국(10.23~24), 미국(10.30~11.1)을 방문하여 공청회와 비공개 인터뷰 등을 통해

조사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조사 활동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제24차 유엔 인권이사회(9.17), 제68차 유엔 총회(10.29)에서 각각 구두보고(oral update)를 실시하였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구두보고에서 공청회와 비공개 조사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증언이 북한에서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를 구성하는 대규모의 패턴(large-scale patterns)을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2014년 3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최종 서면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 사실을 규명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북한 당국의 비협조로 인하여 가해자 규명 등 조사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엔, 개별국가와 국내외 NGO 등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지속하였다. 무엇보다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그동안 유엔 보고서를 종합하여 북한 내 인권침해 실태를 9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 ‘비참한(deplorable)’ 수준이라고 평가(1.14)하였다. 그리고 ‘2012 연례 국제인권-민주주의 보고서’(4.15), 미 국무부 ‘2012 연례 국제 인권보고서’(4.19) 등 개별국가들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인권 상황이 열악하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미국 국무부는 ‘2012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5.20)에서 북한을 종교자유탄압 특별관심국으로 재지정하고 ‘연례인신매매보고서’(9.17)에서 북한을 최저 등급인 3등급 국가로 재분류하는 등 권리별 실태에 대해서도 극히 열악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국제기독교단체인 ‘오픈도어스’의 ‘2013 월드워치 리스트’(1.8), ‘프리덤하우스’의 ‘2013년 세계자유보고서’(1.17), ‘국경 없는 기자회견(RSF)’의 ‘2013년 언론자유 지수’(1.30) 등 국제인권 NGO들도 인권보고서를

통해 권리별로 북한의 인권상황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연구원의 『북한 정치범수용소』,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정치범수용소 특별보고서 등을 통해 최근 정치범수용소 실태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었다.

또한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HRNC Canada)의 ‘Brutality beyond Belief’(1.16), 미 북한인권위원회(HRNC)의 ‘The Heart of Darkness: North Korea’s Hidden Gulag’(11.6) 등 반인도 범죄 차원의 북한인권 캠페인 및 토론회가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제1회 유럽 북한자유주간 행사(10.7~14)가 영국과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등 4개국에서 개최되는 등 유럽 내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국내적으로도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활동이 이어졌지만 금년에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는 못하였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이 조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을 보고(3.27)하였다. 그리고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북한인권법이 새롭게 발의되었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던 ‘북한인권재단 설립’ 관련 조항을 제외한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의 ‘북한인권법’(3.29),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 방안을 규정한 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북한민생인권법안’(7.25)이 각각 새롭게 발의되었다. 그렇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북한인권법 공청회 개최(6.26),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 추진의원 모임’ 결성(9.6), ‘북한인권 시민단체 신년하례회 및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토론회’(1.24), ‘역사적 시대적 과제로서의 북한인권법 제정 세미나’(3.19), ‘북한인권법 통과 관철을 위한 탈북단체 연합행동’ 기자회견(6.25), 북한인권법 통과 촉구 ‘탈북민 대국회 호소단’ 출범(10.16) 등 민간 차원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이 외교통일위원회에 공식

적으로 상정되지는 못하였다.

김정은 제1비서가 유일영도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주민통제 및 사회통제를 강화하면서 북한 내 인권상황의 전향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장성택에 대한 비인권적 처형을 계기로 북한 정권의 비인권적 성격에 대한 비판이 고조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 사법제도의 전근대성과 비인권성에 대한 비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북한 내 인권침해에 대한 개인 및 기관의 책임성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인권상황 비판 및 북한인권 개선 요구에 대해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는 등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대해 부정적·비협조적 자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14년에도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등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인권 개선활동이 지속될 것이다. 특히 2014년 3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서면보고서 제출, 4월 북한에 대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시 인권이사회 이사국과 유엔 회원국, 국제인권 NGO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비판이 강화되고 개선을 요구하는 권고활동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대규모 인권침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제출할 서면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권고(recommendations)와 이행방안(follow-up action)에 따라 북한인권 개선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모니터링 및 감시를 넘어 국내외 인권 NGO를 중심으로 북한 내 대규모 인권침해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북한인권 캠페인이 전개될 것이다. 특히 정치범수용소뿐만 아니라 식량에 대해 권리의 관점에서 북한 당국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요구가 강화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시한 9개 인권침해 유형에 입각한 인권침해 조사시스템 구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특히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인권유린 책임자에 대한 처벌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국가기관과 개인의 책임성 규명 관점에서의 개선활동이 강화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해자를 규명할 수 있는 인권침해 조사활동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내외 인권 NGO들이 국제연대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보다 강화해나갈 것이다.

2014년 북한에 대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가 실시될 예정이다. 북한이 1차 UPR에서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된 점을 고려하여 2014년 4월로 예정된 북한의 2차 UPR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제협력이 강화될 것이다. UPR의 상호대화 과정에서 다른 유엔 인권메커니즘인 유엔 조약기구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필요성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이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한 것을 계기로 북한 당국에 비준하라는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엔 조약기구에 대한 북한 당국의 비협조적 자세도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유엔 조약기구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유엔 조약기구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으로 일관하고 있는 바,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유엔 조약기구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의무를 준수하라는 목소리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내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선 새누리당 내에서 각각 발의된 5개 법안에 대한 통합 법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될 것이다. 민주당도 인도적 지원 중심의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나갈 것이다. 새누리당의 통합 법안이 마련되면 법안 조율을 위한 국회 차원의 여야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전히 극명하다는 점에서 쟁점법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 김수암 통일학술정보센터 선임연구위원

나. 대북지원

박근혜정부는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제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인도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할 것을 천명하면서 그 일환으로 취약계층 우선 지원과 보건·의료 협력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커트 캠벨(Kurt M. Campbell)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이끄는 미국 정부 대표단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북핵 개발은 용인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은 깊이 생각해볼 문제인 만큼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화 채널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실현을 위해 계속 열어두겠다”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도 지원을 강조하였다(1.16). 이어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을 5개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로 천명하면서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을 전략과제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경제부흥’, ‘문화융성’과 함께 ‘국민행복’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2.25). 박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로 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라며 남한 주민만이 아닌 한민족 모두가 ‘국민행복’의 주체임을 밝혔다. 그리고 통일부는 2013년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9가지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첫 번째 과제로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제시하였는데 세부 추진과제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유엔 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을 거듭 천명하였다(3.27).

남한의 대북지원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2007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5·24조치로 대북 인도적 지원도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영유아 등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만큼은 지속되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에 들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되었다. 정부는 유진벨 재단의 결핵약 반출을 승인한 데 이어(3.22),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승인(7.29)하고 UNICEF의 영유아 사업을 지원하였다(8.5). 이어 유진벨 재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남북평화재단,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등 4개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반출을 승인하였고(9.6), WHO의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하였다(9.2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제10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남한 정부는 「2013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2013~2017)」을 심의하였다(9.25).

대북지원은 국회의 입법 활동 및 공청회를 통해서도 논의되었다. 심윤조 의원은 북한인권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3.29). 이 법안은 19대 국회 들어 발의된 다섯 번째 북한인권법(안)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윤후덕 의원은 「북한민생인권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7.25). 이 법안은 인도적 지원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기구로 인도주의자문위원회와 인도주의정보센터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재근 의원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9.17), 심재권 의원은 「북한주민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1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북한영유아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12.12).

통일부는 201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9.26) 대북 인도적 지원에 6,802억 원을 책정하였다. 2013년도 7,238억 원에 비해 약 400억 원 감소한 규모이다. 2014년도 예산 6,802억 원 가운데 국제기구 및 민간 단체를 통한 대북지원은 884억 원, 당국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5,918억 원이 책정되었다.

민간 차원에서는 종교계와 시민사회, 여성계, 보건·의료계, 대북 지원 민간단체들이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사회협약」을 체결하였다(1.16). 이 협약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의 범위를 영유아 지원 사업에서 탈피하여 각종 재난에 대한 긴급 구호,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개발지원을 포괄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013년에도 유사한 주장이 이어졌다.

북한의 장성택 실각과 처형은 2014년 상반기에는 대북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성택 처형 과정에서 보여준 김정은 정권의 잔인함은 교류와 협력, 대북지원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보다는 압박과 책임 규명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에 무게를 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5·24조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이고, 국제사회 역시 대북 지원 중단 내지 축소에 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이 대남 도발을 감행하거나 추가 핵실험에 나설 경우 대북지원은 훨씬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만큼은 명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남북관계에서 대북지원 민간단체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남한 정부도 북한 취약계층 지원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일관되게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 내부 요인으로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김정은 정권은 적어도 2014년 상반기에는 정권 안정화를 위한 체제 결속 및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성, 아동, 장애인 등 북한 주민들의 취약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외부세계에 알려질 경우 북한 주민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재개될 수 있다. 남한 정부는 민간 차원과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5·24조치의 항배와 북한 정권의 안정화 정도에 따라 대북지원의 규모와 방법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박근혜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 영유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05년 「북한영유아

지원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2014년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현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전제로 북한의 취약계층별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 작업은 북한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 작업을 토대로 (가칭)「신 영유아 지원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다. 계획 수립 시에는 북한 영유아 및 임산부 지원 사업이 강화되고, 특히 임산부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원방안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의 경우에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건강권과 영양지원을 중심으로 지원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2012년 장애인올림픽에 최초로 참가한 데 이어 2013년에는 장애인권리협약 서명(7.3), 장애인보호법 개정(11.21), 국제장애인 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IPC) 정회원 가입(11.22) 등 장애인 정책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조치들을 보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북한 장애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북한의 맹아학교와 농아학교의 정상적인 운영, 북한 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정책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이 모색될 가능성이 있다.

입법 활동을 통한 대북지원 논의는 201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9대 국회 들어 발의된 5개 북한인권법(안) 가운데 4개 법(안)에 인도적 지원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도적 지원 조항의 포함 여부와 북한인권법과 북한 민생인권법의 통합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북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정 문제,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문제, 북한주민 모자보건 지원 법률 제정 문제 등 대북지원 관련 법제 정비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인권법 제정과 대북지원 관련 법제 정비는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제고, 국회의 협상력, 북한인권 상황, 남북관계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 이규창 북한인권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다. 북한이탈주민문제

김정은 체제의 국경통제 및 사회통제 강화로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2년 연속 1,000여 명대로 떨어졌다. 2010년을 기점으로 20,000명을 돌파한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2011년 2,706명을 기록한 반면, 2012년에는 1,509명을 기록하면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2013년 11월 말 기준, 국내 유입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1,420명이다. 이는 2012년과 비슷한 규모이며, 김정은 체제 하 탈북환경의 악화가 지속적 현상임을 보여준다. 또한 각각 남성 341명, 여성 1,079명의 규모로 여성의 비율이 70%를 상회하는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추세와 동일하다. 한편, 유엔난민기구(UNHCR)는 세계난민유형 보고서(6.19)를 통해 2012년 말 기준, 난민 지위를 받은 북한이탈주민이 총 1,110명이며, 망명을 신청하고 대기 중인 탈북자는 1,027명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한국에 정착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받은 탈북자를 제외한 수치이다.

북한이탈주민 관련, 2013년에 가장 주목되는 사건은 지난 5월 라오스에서 9명의 탈북청소년들이 중국을 거쳐 북송된 사건(5.28)이다. 최근

탈북추세의 특징 중 하나는 한국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많은 숫자가 남한에 있는 가족을 통해 지원과 정보를 획득하는 이른바 탈북 가족네트워크의 가시화이다. 이러한 가족네트워크는 탈북과정의 예측 가능성 증대 및 탈북 루트의 안정화라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탈북 루트의 안정화 현상은 2013년 라오스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또 다른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라오스에 도착한 탈북고아들의 복송 사건을 주도한 북한 당국의 행태는 이례적인 것이었으며, 라오스 당국의 협조 또한 이례적이었다. 5월의 라오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거쳐 라오스, 태국 등 동남아 국가를 거치는 탈북 루트가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중국 및 동남아에서 발생하는 탈북자 대응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 산하에 전담조직인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을 신설(8.28)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였다. 2013년 한 해 북·중 간 탈북자 단속협력도 전반적으로 강화된 추세로 파악된다. 중국의 경우 새로운 출경입경관리법 시행(7.1)을 통해 불법 입국 및 체류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탈북환경이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도강비용을 포함한 한국 입국을 위한 탈북비용 자체가 증가하였다. 해외 체류 탈북자의 경우 실태파악이 용이하지 않으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국 동북3성 내 탈북자 수는 7,500여 명, 탈북여성인 출산한 아동의 경우는 20,000여 명으로 파악된다. 탈북여성 출산아동의 경우 지난 3~4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 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수는 4,000여 명으로 분석되고 있다.

탈북고아 보호를 위한 미국의 ‘북한아동복지법(North Korean Child Welfare Act of 2012)’은 상원을 거쳐 하원을 통과(1.1)하고, 대통령의 서명(1.14)을 받아 발효하였다. 이 법은 재외 북한 아동 보호를 위해

미국 정부가 가족 상봉 및 입양 등을 추진하고 국무부가 탈북고아 실태파악 및 보호전략 수립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04년 북한인권법 발효 이후 미국에 재정착한 북한난민의 숫자가 163명이며, 2011년과 2012년 각각 23, 22명에 이어 2013년(2012.10~2013.9)에는 17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북한아동복지법은 기존의 북한인권법과 더불어 미국 내 북한난민 정착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맞춤형 정착지원’을 표방하고 있다. 이는 변화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유입현상에 적극 대처하고 이들의 취업, 교육,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하되 개개인의 필요를 중심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은 한국 사회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함과 동시에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및 실질적 통일 준비를 위해 남북 통합과정에서 이들의 역할을 더욱 구체화하는 역할 또한 하고 있다. 정부의 정착지원 사업은 중앙에 집중된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의 하나 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 강화, 탈북민 경제적 자립 인센티브 강화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탈북여성, 탈북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13년에도 2012년에 이어 한국에 기 정착한 탈북자들의 재입북 사태가 발생하였다. 2012년 말에 재입북한 김광호 부부와 고경희는 인민문화궁전에서 국내외 기자회견(1.24)을 가졌다. 또한 이혁철, 김경옥, 강경숙은 재입북하여 고려동포회관에서 좌담회(5.17)를 가졌다. 대내적으로 김정은 체제는 강력한 사회통제 및 국경통제를 통해 사상적

이완을 방지함과 동시에 재입북자들을 적극 활용하여 김정은 우상화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남한에 기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라도 북한 당국이 남은 가족에 대한 위협을 명시화하거나 혹은 설득을 통해 유인할 경우 재입북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가족네트워크에 의해 한국으로 오게 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북한 당국의 체제선전에 이용당한 이후 남한사회를 경험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 사회 내 탈북자 재입북 사태에 대한 근원적 처방이 요청된다.

2014년에도 연속적으로 두 해 동안 감소했던 국내 유입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점차 회복되리라는 전망을 하기는 힘들다. 김정은 체제의 강력한 국경통제 및 엄격한 사회통제가 지속되는 이상 기본적인 탈북자수의 증가를 예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장성택 및 그 측근에 대한 숙청 및 처형으로 대변되는 김정은 체제 내 공포정치의 확산은 또 다른 전망을 가능케 한다. 즉, 북한의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망명 혹은 기획탈북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성택의 처형을 통해 향후 북한 체제의 권력지형이 급속히 변화되고, 북한 내 장성택의 측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도층 인사에 대한 숙청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들 엘리트 계층 중 일부가 선제적으로 탈북 및 망명을 모색할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14년에는 강화된 사상·국경·사회통제로 인해 일반주민의 탈북현상은 억제될 가능성이 크지만, 동시에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 확대로 인한 지도층 인사의 탈북 가능성은 더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적으로 2014년에는 정부의 맞춤형 정착지원도 다양한 북한이탈 주민의 특성을 감안하여,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00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전체의 10%를 차지하는 탈북청소년 교육 및 학교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 불어 한국 사회 내 탈북민에 대한 포용 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 노력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서면보고서가 2014년 3월 발표될 예정으로 이는 특히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가 더욱 구체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 한동호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라. 이산가족문제

어렵게 성사된 추석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북한의 일방적 연기 통보로 무산되면서, 2013년에는 이산가족문제와 관련 남북 간 구체적 성과 도출은 없었다. 2010년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된 제18차 이산가족 상봉 이후 남북 이산가족 교류는 사실상 정지된 상태이다.

북한의 제의로 시작된 남북당국회담 개최 협의를 위한 실무접촉(6.6)에서 6월 12일 서울에서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이산가족문제가 다른 현안들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결국 수석대표의 '격'을 둘러싼 대립으로 개최 예정일을 하루 앞둔 11일 무산되었다. 북한은 다시 금강산관광 재개 및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의를 제의(7.10)하여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수용하였지만, 북한은 개성공단 문제해결에 집중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실무접촉을 보류한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7.11)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를 제안하면서 시기를 ‘추석 전후’로 언급하였고,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8월 23일 판문점에서 열자고 제의(8.16)하였다. 북측의 호응으로 23일 개최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남북한은 추석을 전후로 한 이산가족 대면 및 화상 상봉 행사에 합의하였다.

남북은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 각각 100명 규모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회담 장소로 서울-평양을, 규모는 200명을 제시했지만, 북측이 금강산을 고집하고 규모는 100명이 최대능력이라고 주장해 북측 입장을 수용하는 대신 11월 추가 상봉에 합의, 사실상 상봉 규모를 확대하는 효과를 도모하였다. 양측은 대면 상봉과 별도로 화상상봉도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쌍방 40가족씩의 규모로 진행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우리 정부는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상봉 정례화, 생사주소 확인, 생사가 확인된 이산가족의 서신교환,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사주소 확인 등을 추가로 북측에 제안했다. 4개 항목으로 이뤄진 남북 간 합의서에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제외되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생사확인, 서신교환 실시 등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는 내용만 명시되었다. 그럼에도 정부 당국자는 관례에 따라 10% 정도는 국군포로 또는 납북자 이산가족이 포함될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우리 측 시설점검팀 55명의 방북(8.28)에 이어, 우리 측 250명과 북측 200명이 포함된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생사확인 의뢰 명단

교환(8.29)이 이루어졌다. 또한 9월 3일부터는 우리 측 보수 인원 수십 명이 금강산에 체류하며 여러 가지 상봉 시설에 대한 보수 활동을 진행하였다. 남측 96명, 북측 100명으로 구성된 추석 이산가족 상봉 최종 명단을 교환(9.16)하고, 우리 측 사전 선발대가 금강산에 도착, 북측과 행사 진행을 위한 막바지 협의를 시작(9.20)하는 등 일부 숙소 문제와 같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던 추석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본 행사를 나흘 앞둔 2013년 9월 21일 북한이 돌연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를 동족대결에 악용하고 있다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정상적 분위기가 마련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상봉 연기에 대해 ‘반인륜적 행위’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산가족 상봉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의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근거한 2013년 이산가족 생존자의 평균 연령은 77.89세이고, 70세 이상의 고령 생존자는 전체의 80.83%이며, 상봉 신청자 중 이미 사망한 사람은 43.8%인 5만 6천544명에 달해 이산가족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추진과 병행해 2012년 하반기 이산가족 영상편지 사업을 4년여 만에 재개하여 우선 선정된 800명에 대해 2013년 3월까지 영상편지 제작을 마쳤고, 11월부터 연말까지 추가로 2천 편의 영상편지를 제작하고 있다. 또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 서독이 동독 내 정치범 송환 때 돈을 대가로 지급한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와 통일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편, 재미 한인단체를 중심으로 미국 내 이산가족 현황 파악 및 가족상봉 신청 접수 등의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이와 관련 미국 적십자사와의 협의도 진행되었다.

2013년 북한 정권 내의 급격한 권력 변동 등을 감안할 때, 2014년 북한은 국내적 통제조치에 더 방점을 두어 남북 간 현안에 대해서는 더욱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2014년에도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의 실질적 해결 차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남북 당국 간 이산가족 상봉을 매개로 한 실무접촉이 성사될 가능성은 충분하며, 이에 따라 2013년 연기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전격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조정현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부록: 2013년 주요 사건일지

주요 사건일지

- 1.1 김정은, 육성 신년사 발표
한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임기 시작
- 미 하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 규탄 결의안 통과
- 1.7~10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과 리처드슨 전 멕시코 주지사 방북
- 1.9 북·중, 평양에서 북·중 경제·무역·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7차 회의
및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 1.14 미국, 2012 북한아동복지법 발효
- 1.2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장거리 로켓 관련 대북제재 결의 2087호 채택
- 1.23 북 외무성 성명, 유엔 안보리 결의 배경 및 평화적 위성발사권리 주장
- 1.24 재입북 탈북자 김광호 부부 및 딸, 고경희(女) 기자회견
- 1.26 김정은,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 주관
- 1.28 북한, ‘당 제4차 세포 비서대회’ 개최
- 1.30 북한, 한·미연합훈련 비난
- 2.4~6 한·미 연합 해상훈련
- 2.5 북한, 약수·온천 개발 관련 ‘광천법’ 제정
- 2.9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10대 죄행록 발표
- 2.11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개최
- 2.12 북한, 제3차 핵실험
- 2.13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
- 2.22 미·일 정상회담
- 2.25 박근혜 대통령 취임
미 상원, ‘북한의 핵확산 및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통과
- 3.7 김정은, 서해 최전방 장재도·무도 방어대 시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094호 채택
- 3.9 북 외무성 대변인 성명, 안보리 결의 규탄 및 전면 배경, 핵보유국 지위와 위성 발사국 지위 영구화 주장
- 3.11 북한,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적십자채절) 간 직통전화 차단
- 3.15 북한, 동해 공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 두발 시험 발사
- 3.18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백서 발표
- 3.21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및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치 결정
미·러 6자회담 수석대표, 모스크바에서 회동

- 3.22 북 외무성 대변인,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전면 배격
정부, 유진벨재단 결핵약품 6억 7,800만 원 상당의 대북지원 승인
- 3.27 북한, 남북 간 군 통신선 단절 및 군 통신연락소 활동 중단 발표
- 3.29 북한, 장애어린이 치료·교육 전문시설 ‘조선장애어린이회복중심’ 개소
- 3.31 북한, 당중앙위 전원회의 개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채택
- 4.1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 개최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워싱턴 D.C.에서 회동
- 4.2 북 원자력총군, 영변 원자로 재가동 선언
- 4.3 북한,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 출경 제한
- 4.9 북한, 개성공단 근로자 결근 및 가동 중단
- 4.12~15 존 케리 미 국무장관, 한·중·일 순방
- 4.21~24 우다웨이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 방미
- 4.27 정부, 개성공단 우리 측 체류인원 전원 철수
- 4.29 러·일 정상회담
- 5.2 북한,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15년 노동
교화형 선고
- 5.3 개성공단 현지에 남아있던 개성공단관리위원장 등 7명, 북한과 임금·
세금 문제 등 협의 후 전원 귀환
미국, 북한에게 케네스 배의 사면·석방 공식 촉구
- 5.7 한·미 정상회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조사위원 임명(마이클 커비 위원장,
소냐 비셰르코, 마르주끼 다루스만)
중국은행이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모든 금융거래중단 사실 통보 등
중국 대형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중단 선언
- 5.8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 5.12~18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한·중·일 순방
- 5.14~17 이지마 이사오 일본 특명 담당 내각관방 참여(자문역)
- 5.17 북 조선중앙통신, 탈북 재입북자 리혁철, 김경옥, 강경숙 죄담회 보도
- 5.18~20 북한, 동해안 일대 단거리 발사체 5기 발사
- 5.22 ‘6·15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행사’ 개최 제의
- 5.22~24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방중
- 5.28~29 탈북 청소년 9명, 라오스에서 중국으로 추방, 북송
- 5.30 미 국무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불포함
- 5.31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 당국에 강제북송
탈북 청소년 안전보장 요구
- 6.1 제12차 아시아안보회의 계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 6.2 정부,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행사 대북 협의 개성
방문 불허
- 6.5 정부, 유엔 대북제재 결의 2094호 이행보고서 제출

- 6.6 북한, 남북당국회담 제의
정부, 남북당국회담 긍정적 수용
- 6.7~8 미·중 정상회담
- 6.9~10 남북장관급회담 실무접촉, 남북당국회담 개최(6.12~13) 합의
- 6.10 미 상원, 북한에 대한 식량(영양) 지원 금지 조항 포함 농업법(Farm Bill) 통과
- 6.11 북한, 우리 측 수석대표 격(格) 문제로 남북당국회담 대표단 파견 보류 통보
- 6.18~22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방중, 북·중 전략대화 개최
- 6.19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 6.20 북한, 라오스 송환 탈북 청소년 죄담회 공개
- 6.21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 6.26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인권법 공청회 개최
- 6.27~30 한·중 정상회담
- 7.1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 7.2~3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방러, 김성남 당 국제부 부부장 방중
- 7.3 북한, 장애인권리협약 서명
- 7.4 정부,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 개최 공식 제의
- 7.6 남북 개성공단 1차 실무회담, 개성공단 재가동 원칙적 합의
- 7.8~11 후루야 게이지 일본 납치문제 담당상 몽골 방문
- 7.10 북한, 금강산관광 재개 및 이산가족 상봉 실무회의 제안
- 7.11 북한, 금강산관광 재개 및 이산가족 상봉 실무회의 보류
- 7.15 존 케리 미 국무장관 방중 및 시진핑 국가 주석 회견
파나마에서 미사일부품 선적 의심 북한 선박 적발
- 7.18 중국, 탈북자 김광호씨 가족 체포 공식 확인
- 7.25~28 중국, 리위안차오 국가부주석 방북
- 7.26 남북 적십자사, 동아시아 적십자회의 동시 참석
- 7.27 정부, '유엔군 참전 정전 60주년 기념식' 개최
미국, '정전협정 체결 60주년 기념식' 개최
북한, '전승절 60돌 기념행사' 개최
- 7.28 후루야 게이지 일본 납치문제 담당상 베트남 방문
- 7.29 정부, 5개 민간단체 대북지원 승인
- 8.5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유엔아동기금(UNICEF)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 기금지원 결정
- 8.7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성공단 기업 정보보험금 지급 결정
- 8.13 정부, 대북지원 민간단체 모니터링 방북 승인
- 8.14 남북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 공단중단 재발방지 및 발전적 정상화 방안 합의

- 8.16 한적,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을 통한 대북 수해 지원 결정(10만 불 상당)
- 8.18 남한, 이산가족 상봉 관련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제의
- 8.18 북한, 이산가족 실무접촉 수용 및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 제안
- 8.18~27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방한
- 8.19 탈북자 김광호 씨 부부 및 딸 한국행, 처남·처제 북송
- 8.20 북 조평통 대변인 담화, 2013 UFG 관련 최초 공식 비난
- 8.20~23 피터 마우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총재 방북
- 8.22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방한
- 8.23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추석 이산가족 상봉(9.25~30) 합의
- 8.26~30 우다웨이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 방북
- 8.27~31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방일
- 8.28 외교부, 탈북자 전담 태스크포스(TF) 한민족공동체팀 조직 발족
- 8.29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
- 이산가족 상봉 관련, 남북 ‘생사확인 의뢰서’ 남측 250명, 북측 200명 교환
- 8.30 북한, 억류 케네스 배 석방을 위한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초청 철회
- 9.2 정부, 국내 12개 민간단체 반출 승인
- 9.5 대니얼 러셀 美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방한
- 9.7 남북, 서해지구 군통신선 복구
- 9.10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서울 회동
- 9.11 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 베이징 회동
- 9.16 개성공단 재가동 및 개성공단 공동 투자설명회 개최 합의
- 남북, 이산가족 상봉 최종명단 남측 96명, 북측 100명 교환
- 군 당국, 월북 시도 남성 사살
- 9.18~20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태국 방문
- 9.21 북 조평통 대변인 성명, 이산가족 상봉행사 일방 연기 발표
- 9.22 북 러, 나진-하산 철도 개보수 구간 개통식(나진항)
- 9.23 중국 상무부, 대북 수출금지 품목 및 기술목록 발표
- 9.25 2013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개최
- 9.26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세계보건기구(WHO)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 기금 지원 결정
- 9.30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개소
- 재입북 탈북자 박진근, 장광철 죄담회
- 10.1 정부, 재입북 탈북자 2명 신원 확인
- 10.7 APEC(발리) 한·중 정상회담
- 10.10 북한 억류 케네스 배 모친 방북 및 면회

- 10.11 정부, 북측에 개성공단 공동 투자설명회 연기 요청
- 10.12 조계종 관제자 22명 방북, '신계사 낙성 6주년 기념 남북합동법회' 개최
- 10.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부에 개성공단 현장방문 공식 요청
- 10.16 북한, 개성공단 공동 투자설명회 연기 동의
 북한,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개성공단 방문 입장을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북측에 전달
- 10.17 정부, 3개 민간단체, 총 12명의 대북 인도지원 모니터링 방북 승인
- 10.23~2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영국 방문
- 10.24 북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개성공단 현장방문 수용입장 전달
 북한, 통지문을 통해 '불법입국 하였다가 단속된 우리 측 인원 6명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돌려보내겠다'는 입장 통보
- 10.25 정부, 관문점을 통해 북한 여류 우리 국민 6명과 유해 1구 인수
- 10.26 해군·해경, 기관 고장으로 동해상 표류 북한 어선 1척(북한 주민 4명 승선) 구조, 27일 북한 측에 인계
- 10.2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개성공단 현장방문
- 10.28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회담
- 10.28~31 차히야 엘베도르지 몽골 대통령 방북
- 10.29 북한, 김형준 북한 외무성 부상 방중
- 10.30~11.1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방미
- 11.2~7 안토니오 이노키 일본 참의원 의원 방북
- 11.4~8 우다웨이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 방북
- 11.7 북한, 국정원 '첩자' 체포 조사 중이라고 주장
 정부,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 확정
- 11.6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3자회담
- 11.13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재개 조건 등을 협의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한 및 한·러 정상회담
- 11.13~15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한
- 11.20 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 베이징 회동
 북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비난 및 배격
- 11.21 북한, 경제개발구 및 신의주 특구 발표
 북한,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일꾼대회 개최
- 11.24 북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정식 회원 승인
- 11.25 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 11.26 정부, 연평도 해상 표류 북한 주민 관문점 송환
- 12.2 북한, 국제이동위성기구협약 가입

-
- 12.3~4 미·러 6자회담 수석대표, 워싱턴 D.C. 회담
12.6 북한, '장애자보호법' 개정
조 바이든 미 부통령, 박근혜 대통령 예방
12.7 북한, '적대행위' 혐의 억류 미국인 메릴 뉴먼 추방
12.9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모든 직무 해임 및 출당·제명
12.12 북한,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장성택 사형 집행
12.17 정부, 2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물품 반출 승인
12.18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연구총서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2011-10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배정호 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13,500원
2011-12(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외	15,500원
2011-12(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13,500원
2011-12(I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외	18,000원
20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전성훈	14,000원
2012-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외	11,000원
2012-03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이규창 외	11,000원
2012-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유럽공동체 형성기를 중심으로	손기웅 외	14,000원
2012-05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교덕 외	13,000원
2012-06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박형중 외	11,000원
2012-07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2012-08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 분석	홍우택	8,000원
2012-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전병곤, 양갑용	6,000원
2012-10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박종철 외	12,500원
2012-11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외	11,500원
2012-12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2012-13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외	8,000원

2013-01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이기현 외	6,000원
2013-02	한국의 FTA전략과 한반도	김규륜 외	8,500원
2013-03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책	박종철 외	10,000원
2013-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 EC기 분석을 중심으로 -	손기웅 외	12,000원
2013-05	오바마·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배정호 외	11,000원
2013-06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전망: 비교사회론적 관점	조한범, 황선영	6,000원
2013-07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이규창 외	12,500원
2013-08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조정아 외	15,000원
2013-09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 연구	홍우택	6,000원
2013-10	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계	박형중, 최사현	7,000원

학술회의총서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2011-02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8,500원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O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19,000원
2012-03	해외 이주·난민 지원제도의 시사점		12,000원
2013-01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증진방안		20,000원
2013-02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추진전략		19,000원

협동연구총서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상)	황병덕 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중)	황병덕 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하)	황병덕 외	13,500원
2011-15-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1-15-02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박형중 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영호 외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장형수 외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이종무 외	9,500원
2011-15-06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준 외	9,000원
2012-11-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2-11-02	북한 부패실태와 반부패 전략 국제협력의 모색	박형중 외	10,000원
2012-11-03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장형수 외	8,000원
2012-11-04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이종무 외	8,000원
2012-11-05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방안		
		이상준 외	8,000원
2012-12-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 -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3,500원
2012-12-02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 공공외교 분석틀		
		김규륜 외	8,500원
2012-12-03	미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9,500원
2012-12-04	중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교덕 외	7,500원
2012-12-05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진원 외	8,000원
2012-12-06	러시아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여인곤 외	7,5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1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2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1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2013)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i>	김국신 외	17,500원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i>	손기웅 외	23,500원
북한인권백서 2013	조정현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i>	조정현 외	23,000원

기타

2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1-1)	박형중 외	17,000원
--	-------	---------

2011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1-2)	임강택 외	6,500원
2011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조민 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 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 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1)	김규륜 외	19,000원
2011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2)	조한범 외	10,5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3)	임강택 외	9,500원
2011	2011년 통일에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8,000원
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 편	8,000원
2011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 Ki		4,000원
2011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 외	35,000원
2012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허문영 외	30,000원
2012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통일대계연구 12-01)	박형중 외	15,000원
201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지역 및 주변국 차원 (통일대계연구 12-02)	박종철 외	14,000원
2012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n Order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12-03)	최진욱 편저	6,000원
2012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im Kyuryoon, Park Jae-Jeok		13,000원
2012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	배정호, 구재희 편	22,000원
2012	China's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and Major Countries' Strategies toward China	Bae Jung-Ho, Ku Jae H.	22,500원
2012	통일 비용·편익의 분석모형 구축(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1)	김규륜 외	11,500원
2012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2)	김규륜 외	9,000원
2013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편	18,000원
2013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 및 특징 연구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정책협력방안 2013)	전병곤 외	9,000원
2013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박종철 외	13,000원
2013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통일외교 컨텐츠 생산(1)	배정호 외	16,5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조정아 외	11,0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수업지침서	조정아 외	6,000원
2013	민주화 및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1)	박형중 외	13,500원
2013	시장화 및 빈곤감소형 경제질서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2)	임강택 외	12,500원
2013	정치·사회·경제 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02)	조한범 외	17,500원
2013	전환기 중국의 정치경제(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1)	배정호 외	15,500원
2013	China's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and Lessons for Korea and Asia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2)	Bae Jung-Ho, Ku Jae H.	17,5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1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1~2012	6,000원
201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2~2013	7,000원
201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3~2014	7,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외
2012-01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외
2012-02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임순희, 조정아, 이규창
2012-03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배정호 외
2012-04	제4차 당대표자회와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 분석	박형중 외
2012-05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동향	이금순, 한동호
2013-01	2013년 북한 신년사 집중분석	전성훈 외
2013-02	3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전성훈 외
2013-03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내외정책 방향: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전병곤, 이기현

2013-04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논의 동향	박형중, 박영호, 김동수
2013-05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북정책에의 함의	임강택
2013-06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외
2013-07	한중정상회담 결과 분석	이기현
2013-08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평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박영자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2011-02	창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근숙
20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외
2011-04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웅 외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웅 외
2012-01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외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김규륜, 김형기
2012-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2012-03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이영형
2012-04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전망	김장호 외
2012-04(E)	The Second Term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Jangho kim
2012-05	중국 18차 당대회 분석과 대내외정책 전망	이기현 외
2013-01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손기웅 외
2013-02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최진욱 외
2013-03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최진욱 외
2013-04	유엔조사위원회(COI) 운영 사례 연구	김수암 외
2013-05	Trustpolitik: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이론과 실제 탐색연구 -	박형중 외
2013-06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안지호 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손기웅 외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2호	손기웅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1호	이금손 외

-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lh Pyo, Hwang Sun Hye
-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 Am et al.
- 2012-03 Basic Reading on Korean Unification
Huh Moon Young et al.
- 2013-01 Study on the Power Elite of the Kim Jong Un Regim
Lee Kyo Duk et al.
- 2013-02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im Soo Am et al.
- 2013-03 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Park Jong Chul et al.
- 2013-04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s a National Strategy
Son Gi Woong et al.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자료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4,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례정세보고서 2013 |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3~2014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입금자 (입금일자)	-	
근 무 처				
	직 위			
간 행 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전 화		내선 전화	
	핸드폰		FAX	
	전자메일			
전 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학생회원 () 일반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본 신청서를 보내주십시오.
 주소: (우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02)901-2554, FAX: (02)901-2547 E-Mail: pcm@kinu.or.kr
 ※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